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회의

#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 :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 2012.8.29(수) 14:00~18:00 ]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4052, 팩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 ● 일정 및 내용

14:00~14:10 개회사 박명규(IPUS 원장)

14:10~16:00 제1부 |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사회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PUS 초빙연구원)

발표1 :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주변관계 인식, 남한적응실태

송영호 (IPUS 선임연구위원)

발표2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변화인식

김병로 (IPUS HK 교수)

발표3 : 북한사회의 의식주 기초실태

정은미 (IPUS HK 연구교수)

발표4 : 북한사회의 빈부격차실태

장용석 (IPUS 선임연구위원)

16:00~16:15 Coffee Break

16:15~18:00 제2부 | 패널토론 :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과 김정은 체제 전망

사회 박명규 (IPUS 원장)

토론

공용철 (KBS 프로듀서)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

한기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객원교수)



# 차례

제 1 편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2011-2012	1
제 1 장	연구 설계 및 개요	3
1.1	조사의 목적 및 문제의식	3
1.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5
1.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7
1.4	맺음말	14
제 2 장	통일의식	15
2.1	머리말	15
2.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시기, 기대감	16
2.3	통일사회에 대한 기대 인식	19
2.4	요약	23
제 3 장	주변국에 대한 인식	25
3.1	머리말	25
3.2	친근한 국가 vs. 위협적인 국가	25
3.3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29
3.4	맺음말	31
제 4 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33
4.1	머리말	33
4.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33
4.3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의 만족도, 취업형태	36
4.4	맺음말	39

<b>제 5 장</b>	<b>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사회 변화 실태</b>	<b>41</b>
5.1	열며 . . . . .	41
5.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 . . .	42
5.3	북한사회 변화실태 . . . . .	51
5.4	닫으며 . . . . .	66
<b>제 2 편</b>	<b>북한 정치사회 변동</b>	<b>69</b>
<b>제 6 장</b>	<b>2012 북한사회의 의식주 기초실태</b>	<b>71</b>
6.1	조사의 목적과 설문문의 구성 . . . . .	71
6.2	북한사회의 식의주 실태에 관한 기초분석 . . . . .	72
6.3	북한주민의 계층별 식의주 실태: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 . . . .	83
6.4	결론 . . . . .	89
<b>제 7 장</b>	<b>북한사회의 빈부격차 실태</b>	<b>93</b>
7.1	시작하는 말 . . . . .	93
7.2	북한주민들의 빈부격차 요인과 구조 . . . . .	95
7.3	시장경제화 실태 . . . . .	108
7.4	사회의 개방성 . . . . .	120
7.5	맺는 말 . . . . .	123
<b>제 3 편</b>	<b>부록: 토론문 및 설문문항</b>	<b>127</b>
<b>제 8 장</b>	<b>토론문</b>	<b>129</b>
<b>제 9 장</b>	<b>설문문항</b>	<b>137</b>

제 1 편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2011-2012



# 제 1 장

## 연구 설계 및 개요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1.1 조사의 목적 및 문제의식

남한주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많은 연구자들 의해 시도되어왔으나, 북한주민들은 통일과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IPUS)도 2007년부터 해마다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한 『통일의식조사』를 수행해왔지만,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대남의식, 주변관계의식 등을 간접적이거나 이해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IPUS 연례보고서인 『남북한통합지수』의 주요 요소로서 ‘새터민의식조사’를 2008년과 2009년에 해당년도 입국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년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자를 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는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따라 통계분석의 엄밀성에 따른 표본추출이 곤란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1년에 발간한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와 같이 탈북자들의 남한실태적응과 같은 연구에서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연구도 시도해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북한현상’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아주 엄밀하게 규명하기는 지난한 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작업에 연구인력과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흔히 통일과 남북관계의 현실진단과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남북한주민이 의사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의 가치에 대한 동의 또는 합의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사회통합은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 사회의 공통적 가치가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모범과 행동지향의 내면화를 이뤄야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그렇지만 많은 설문조사에 의해 발표되는 통일의식은 남한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것들이 대부분이다.<sup>2)</sup> 따라서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어떠한고 남한주민의 통일의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제한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PUS의 북한주민 의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획 및 수행되고 있다. 첫째, 이 조사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실태, 대남인식,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주변국관계에 대한 인식,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탈북자 정책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IPUS의 『남북한통합지수』의 의식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를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나는 통일의식 및 한반도를 둘러싼 의식과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2011년과 2012년에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 연구조사를 앞으로도 해마다 실시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의식의 변화와 지속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를 통하여 IPUS 연구인력만이 아니라 국내외 연구인력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은 조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조사의 목적, 조사방법 및 조사의 내용, 표

- 1)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방안,”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36-137.
- 2) 예외적으로 2011년 12월 KBS가 ‘통일 대기획’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어 화제를 모았으나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 이외의 조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다루어진 조사 결과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준비에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기에 충분하였다. 정은미·송영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012년 상반기 (통권 제57호), pp. 222-223.

본 및 표본의 특성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절은 조사년도별 조사방법의 차이, 설문문항의 구성과 조사내용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 절은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별,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 고향, 학력, 직업, 경제활동, 남한에 친척의 유무, 북한소식 인지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 변수들의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표본모집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보고서 등에 나타난 국내입국 탈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 연구의 응답자들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설문형식은 탈북자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개인 혹은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남한사회적응실태 분야의 질문들은 이들이 1년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남한에서 체류하면서 지닌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어서 응답자의 현재 의견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그들과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려면 탈북시기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입국을 2011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북시기가 2008년인 경우보다도 2011년인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의 실태변화에 대한 보다 더 타당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북과 입국의 시기의 간격이 길면 길수록 여행과정에서 경험하는 험난한 삶들이 의식의 변형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의 정착기간이 길어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의식의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과 2012년 북한주민 의식조사는 각각 2010년도부터 2011년 4월,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에 탈북하여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조사의 원형인 2008년과 2009년의 “새터민의식조사”는 2008년 7월과 2009년 10월에 하나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조사들은 탈북자들의 입국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이후의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적 패턴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인 기초 준거자료로 활용하

고 있다. 2010년에는 하나원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조사년도		2008	2009		2011	2012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Y	Y		Y	Y
	대남의식	Y	Y		Y	Y
	북한실태변화	Y	Y		Y	Y
	남한적응실태	-	-		Y	Y
	주변국인식	-	-		-	Y
기준년도	입국년도	응답자	응답자	탈북년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10	104	-
	2001-2004	87	94	2011	1	127
	2005-2008	142	-			
	2005-2009	-	175			
	무응답	13	23			
합계		296	370		105	127

Note: 2011년 8월 데이터셋(버전 1.0)은 114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으나, 2012년 8월의 데이터셋(버전 2.0)은 자료 통합 및 재확인과정에서 코딩의 오류가능성이 의심되는 9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105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조사부터 설문대상을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표본모집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정부기관의 협조가 있다면 좀더 구조화된 조사를 하거나 접근가능한 모든 대상을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0년 입국자가 2,401명, 2011년 입국자가 2,706명인데<sup>3)</sup> 탈북년도가 2010년 혹은 2011년인 탈북자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탈북년도를 통제함으로써 모집단의 수가 적어지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사는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인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고 있다.<sup>4)</sup> 즉 소수의 조사대상 탈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

3)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2012년 8월 3일).

4) Karen Farquharson (2005)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담배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어떻게 스노우볼 샘플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Karen Farquharson (2005), “A Different Kind of Snowball: Identifying Key Policyma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8 (4): 345-353.

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조사의 최종 표본의 수는 각기 105명과 127명이다.<sup>5)</sup>

### 1.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 1.3.1 성별·연령별·탈북·입국기간의 특징

표 1.2는 응답자들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도 조사의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44% 여자가 56%이다.<sup>6)</sup> 2011년도 조사보다 응답자의 여성 비율이 약 10% 정도 낮다. 한편 2012년도 조사의 약 53%가 20대 또는 30대이며, 40대는 약 27%이다.

표 1.2: 성별·연령별 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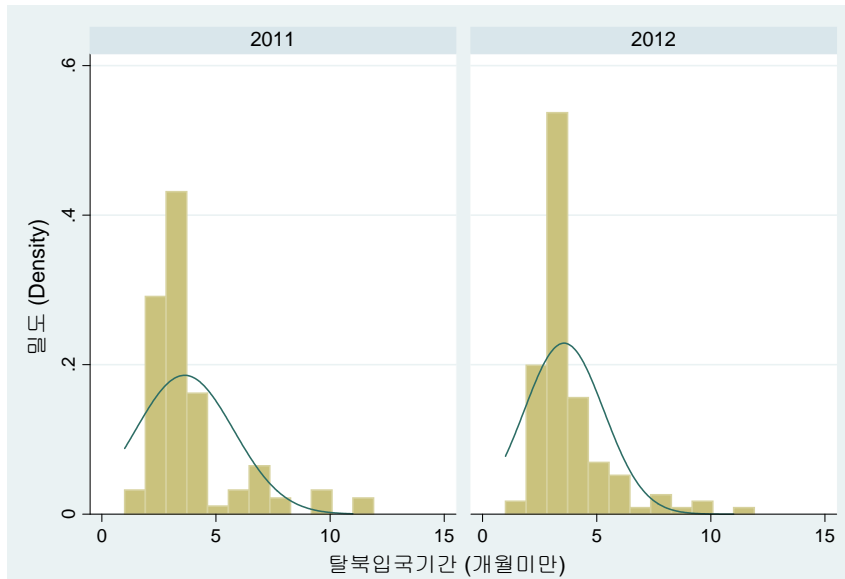
연령	조사년도					
	2011			2012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0대	14 (38.9)	22 (61.1)	36	23 (51.1)	22 (48.9)	45
30대	11 (40.7)	16 (59.3)	27	11 (47.8)	12 (52.2)	23
40대	6 (35.3)	11 (64.7)	17	11 (32.4)	23 (67.7)	34
50대	1 (7.7)	12 (92.3)	13	5 (38.5)	8 (61.5)	13
60대이상	4 (33.3)	8 (66.7)	12	6 (50.0)	6 (50.0)	12
합계	36 (34.3)	69 (65.7)	105	56 (44.1)	71 (55.9)	127

Note: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에 해당한다.

5) 실제 조사대상자의 수는 각기 126명과 150명이었으나, 응답의 신뢰성이 낮거나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경우는 최종표본에서 제외되었다.

6) 통일부에 따르면, 2003년 입국여성비율이 60%를 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75%를 넘기도 하였으나, 2011년에는 70%로 감소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2012년 8월 5일 접근).

그림 1.1: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개월미만)



응답자들의 탈북년도와 입국년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105명 중 104명이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이 2011년에 탈북하였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하였다.<sup>7)</sup> 그리고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전원이 2011년에 탈북해서 2011년에 입국하였다. 즉 2011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 입국하는 과정까지는 1년이 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2011년과 2012년의 전체응답자들이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3.6개월미만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93이었다. 조사년도별 응답자들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은 3.63개월과 3.57개월로 큰 차이가 없으나 표준편차는 2.15와 1.74로 차이가 있다. 즉 그림 1.1에 나타나듯이 2012년 조사에서 더 많은 비율의 탈북자들이 2-5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탈북하고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두 차례 조사의 응답자들의 약 68%가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제3국 등에 장기체류하다가 입국하기 보다는 빠른 시간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2명의 응답자가 입국년도를 밝히지 않아 손실자료(missing data)로 처리되었다.

### 1.3.2 고향·학력·직업별 특징

표 1.3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다. 2011년의 조사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은 각기 52.4%와 38.1%로 전체응답자의 90.5%였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각기 51.2%와 30.7%로 전체 응답자의 81.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194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입국기준으로 재북출신지별 현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최근의 탈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2010년 12월까지 입국한 탈북자들 중 함경북도 출신이 67.3%, 함경남도가 9.4%, 양강도가 7.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표 1.3: 북한의 출신지별 응답자 분포 (%)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남포	0.00	0.79	0.43
평안남도	4.76	0.00	2.16
평안북도	0.00	0.79	0.43
함경남도	3.81	11.02	7.76
함경북도	52.38	51.18	51.72
양강도	38.10	30.71	34.05
황해남도	0.00	2.36	1.29
황해북도	0.95	2.36	1.72
강원도	0.00	0.79	0.43
합계 (N)	105	127	232

두 차례 조사의 응답자들 중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표 1.4에 나타나듯이, 66.7%와 66.4%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도 약 11%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2012년 1월 입국자 기준으로 재북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가 70%, 전문대 9%, 대학이상 8% 등으로 나타난다.<sup>9)</sup>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전문학교와 대학이상이 각기 10%가 넘게 나타나는 등 탈북자들의 재북학력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에 보여지듯이, 재북직업이 노동자였던 응답자들이 27.6%와 37.0%로 가

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1), p. 23.

9) 통일부 홈페이지 (2012년 8월 1일 접근).

표 1.4: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응답자 분포 (%)

교육수준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대학교	11.43	10.40	10.87
전문학교	20.95	18.40	19.57
고등중학교	66.67	66.40	66.52
인민학교	0.95	3.20	2.17
무학	0.00	1.06	0.87
합계	105	125	232

장 많다. 노동자, 농민, 주부, 장사, 사무원은 2011년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69.6%, 2012년 조사에서는 72.4%였다. 전문가와 외화별이군 등은 전체응답자의 10% 미만이었다. 통일부의 2012년 1월 입국자기준 재북직업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의 비율이 38%이고 무직부양도 50%가 넘고 관리직과 전문직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이와 비교하면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 중 전문가, 사무원, 군인 등의 비율이 높다.

표 1.5: 북한에서의 직업별 응답자 분포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노동자	29.29	37.60	33.93
농민	9.09	8.80	8.93
사무원	13.13	4.80	8.48
전문가	8.08	7.20	7.59
학생	7.07	6.40	6.70
군인	6.06	4.00	4.91
외화별이군	1.01	2.40	1.79
장사	11.11	11.20	11.16
주부	11.11	11.20	11.16
무직 및 기타	4.04	6.40	5.36
합계	99	125	224

2012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5%는 노동당원이 아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10) 통일부 홈페이지 (2012년 8월 5일 접근).

1.6 참조). 2011년 조사의 당원 10명의 직업은 노동자(3명), 사무원(2명), 군인(2명), 전문가와 학생이었다. 2012년 조사대상자 18명의 당원들의 직업은 노동자(7명), 사무원(2명), 군인(3명), 그외 전문가, 학생, 외화벌이군, 주부, 무직기타 등이 각 1명씩이었다.

표 1.6: 북한에서의 당원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

당원여부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당원	9.90	14.40	12.39
후보당원	0.99	0.00	0.44
비당원	89.11	85.60	87.17
합계	101	125	226

### 1.3.3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특징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와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을 조사하였다(표 1.7 참조). 2011년 조사의 공식월급의 중간값은 1,200 원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1,400 원이었다. 그리고 두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공식월급의 수준은 1,000 원 이상 5,000 원 미만이었다. 비공식소득의 중간값은 2011년 조사에서는 25,000 원 그리고 2012년 조사에서는 10 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한 비공식소득의 수준은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으로 차이가 없다.

표 1.7에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공식적인 월급보다는 비공식적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8에 보여지는 장사경험의 유무와 비공식적인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장사를 할 수 있으면서 비공식 소득수준이 높은 북한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북한주민들 간에 빈부의 격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의 인터뷰 및 여러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듯이 빈부격차만이 아니라 사회적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월급과 비공식소득의 응답도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지만 장사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도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표 1.8).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의 69.3%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2011년 조사의 10명의 노동당원 중 6명이 장사경험이 있었으며, 2012년

표 1.7: 북한에서의 공식월급과 비공식 수입

공식월급	조사년도		합계	비공식소득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2011	2012	
0 원	27	32	59	0 원	18	21	39
1000 원 미만	7	10	17	1000 원 미만	6	0	6
5000 원 미만	37	46	83	5000 원 미만	7	2	9
1 만원 미만	2	4	6	1 만원 미만	2	2	4
10 만원 미만	6	9	15	10 만원 미만	18	25	43
50 만원 미만	2	5	7	50 만원 미만	19	44	63
100 만원 미만	1	0	1	100 만원 미만	6	8	14
100 만원 이상	-	-	-	100 만원 이상	6	7	13
무응답	23	21	44	무응답	23	18	41
합계	105	127	232	합계	105	127	232

조사에서는 18명 중 10명이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 장사경험의 차이는 크게 달리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대학이상은 38.5%,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들 중 약 78.3%가 장사경험이 있었으며, 약 72.0%의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이 장사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1.8: 장사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분포

장사경험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있다	71.29	69.84	70.48
없다	28.71	30.16	29.52
합계 (N)	101	126	227

### 1.3.4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친척의 유무 (%)

탈북자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에 보여지듯이, 2011년도 조사의 응답자들보다 10% 정도가 더 많은 수의 2012년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19.7%가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59.1%의 응답자들이 조금씩 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자는 2011년 29.4%에서 2011년 21.3%로 감소하였다.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예전에는 인적왕래에 의한 소식

전달이 주를 이루었었지만 근래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한 소식전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9: 탈북 후 북한소식 접근성 (%)

북한소식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3	19.69	17.0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86	59.06	58.08
거의 접할수 없었다	29.41	21.26	24.89
합계 (N)	101	126	227

탈북자들은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10에 의하면, 남한에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들은 2011년 58.1% 였는데, 2012년에는 62.2% 였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입국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두 조사의 모든 응답자들 중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 평균 3.2개월미만(표준편차=1.61)인 반면, 친척이 없는 경우 평균 4.25개월미만(표준편차=2.22)이 걸렸다. 남한의 친척이 있는 경우 탈북-입국기간의 편차가 그리 심하지 않으나, 친척이 없는 경우는 사례에 따라 그 기간이 많이 달라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1.10: 남한친척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분포

남한친척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있다	59.80	62.20	61.14
없다	40.20	37.80	38.86
합계 (N)	102	127	229

결혼의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표 1.11에 보여지고 있듯이, 2012년 조사에는 응답항목에 현재의 결혼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혼’을 추가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1년보다 6.7% 감소한 45.7% 였으며, 결혼은 2.2% 증가한 44.09% 였고 이혼이라고 응답한 탈북자들도 9.45% 였다.

자녀의 수에 대한 조사는 남한에 있는 자녀만이 아니라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44.7% 그리고 2012년에는 47.4%

표 1.11: 결혼상태에 따른 응답자 분포

결혼상태	조사년도		합계
	2011	2012	
미혼	55.56	46.03	50.22
결혼 (동거포함)	44.44	44.44	44.44
이혼	0.00	9.52	5.33
합계 (N)	99	126	225

의 응답자들은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sup>11)</sup>

## 1.4 맺음말

올해의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2011년에 이어 두번째로 수행되었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있었을 때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앞에서 밝히고 있지만 국내입북 탈북자들의 고향이 국경지역의 소수지역으로 국한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해석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북한전체의 의식이라고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는 정보를 접하기 쉽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들일수록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비록 엄밀한 통계적 분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를 통하여 연구팀은 제한적 환경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사회 공동 노력의 일부를 담당하고자 한다.

11) 하지만 결혼상태와 자녀의 수를 교차분석해보면, 미혼이라는 응답자들 중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 탈북자들이 북한과 남한 그리고 제3국 등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조사와는 달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조사에서는 보다 타당한 자료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 2 장

# 통일의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2.1 머리말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이래, 남과 북은 경쟁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해왔다. 그렇기에 과연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논쟁이 끊이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거대 통일 담론 속에서 다뤄지지 못한 것들 중의 하나는 통일을 바라보는 남북한 주민들의 시각이었다. 정책적 경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들의 의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있을 때’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북한주민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조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탈북자들의 눈과 귀를 통하여 제한적이거나 그들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고자 기획하였기에 조사의 결과가 북한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성급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 절에서는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 통일의 가능시기, 통일이 가져 올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남한주민들의 통일의식과 비교할 것이다. 세번째 절에서는 통일의 사회문제개선에 주는 기대감, 대북정책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2.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시기, 기대감

### 2.2.1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우선 탈북자들에게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2011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2년 조사에서도 절대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1.3%,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으며, ‘반반/그저그렇다’는 5.5%였다. 결국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응답자는 1% 미만이었다.

이와 동일한 질문에 남한주민들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7년 63.8%, 2008년 51.6%, 2009년 55.8%, 2010년 59.1%, 2011년 53.7%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 남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증가하였고, 통일이 ‘필요없다’라는 인식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역사적 당위요 민족적 갈망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개인이 북한에서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염원하는가도 조사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조사 모두 각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답자들이 ‘매우 원한다’ 또는 ‘약간 원한다’라고 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던 응답자 1명이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도는 ‘그저그렇다’고 하였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필요없다고 대답하였던 응답자 1명이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보적이었던 7명 모두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처럼 소수의 응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2.2.2 통일의 가능시기

두 조사의 특징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이 5년이내에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전체 여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2.1에 의하면, 2011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40%로 감소하였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011년 조

1)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pp. 20-23.

사에서 26.7% 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43.31%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의 시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과 비관적 현실의식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인식

통일가능시기	조사년도					
	2011			2012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5년 이내	2	19	21	5	10	15
10년 이내	15	17	32	17	20	37
20년 이내	4	9	13	5	6	11
30년 이내	2	1	3	2	0	2
30년 이상	3	4	7	4	3	7
불가능하다	10	18	28	23	32	55
무응답	0	1	1			
합계	36	69	105	56	71	127

2011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던 탈북자 103명 중 7명이 '30년 이상' 그리고 28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던 탈북자 119명 중 7명이 '30년 이상' 그리고 50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탈북자들 중 통일이 필요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응답자들은 2011년에는 약 34%였는데, 2012년에는 약 48%를 차지하였다.

또한 통일 가능시기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염원도를 교차분석해보면, 2011년에는 '매우 또는 약간 원한다'라고 했던 103명 중 7명이 '30년 이상' 그리고 29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에는 126명 중 7명이 '30년 이상' 그리고 55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북한주민들의 인식하는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과는 달리 북한주민들도 통일의 실현가능 시기에 대해 회의적인 사고가 확산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리말하면 규범과 역사적 당위로서의 통일의식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2011년 남한주민들은 단기적 전망보다는 20년 혹은 30년의 장기적 전망을 하고 있었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즉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라고 보는 견해가 18.3%였고, '20년 이내' 혹은 '30년 이내'로 보는 의견이 26.1%와 14.0%였다. 그리고 '30년 이상' 혹은 '불가능하다'라

고 보는 의견도 19.8%와 21.3%였다.<sup>2)</sup> 남북한주민들의 의견을 비교해 볼 때,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염원과는 달리 통일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유보적이며 부정적인 현실인식도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3 통일의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염원한다는 것과 통일이 장단기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4명을 제외한 123명이 통일은 북한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 참조).

표 2.2: 통일이 북한전체 및 북한주민 개인에게 주는 이익 기대감

통일이익	집합적 이익 기대감			개인적 이익 기대감		
	2011	2012	합계	2011	2012	합계
매우 이익이 됨	97	106	203	82	84	166
다소 이익이 됨	8	17	25	18	36	54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음	0	3	3	4	6	10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	0	1	1	1	1	2
합계	105	127	232	105	127	232

2011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통일은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011년 남한주민들은 50.7%만이 남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49.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남북한 주민의 의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경우 북한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남한 주민의 경우는 통일이 초래할 경제적 부담이 남한전체의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집합적 이익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다. 통일이 북한 전체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응답자들 중 21명이 개인에게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로 기대감을 낮추고 있으며,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로 기대감을 낮춘 응답자들도 4명이었다. 반면 통일이

2) 통일평화연구원 (2011), pp. 27-28.

3)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30.

북한전체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던 이들 중에 개인적인 기대감을 더 높게 평가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남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7.8%이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72.2%나 된다. 그리고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22.9%로 2009년의 29.3%보다 줄어들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민족적이고 역사적 당위차원에서 인식하는 반면, 남한주민들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통일정책이 국가와 사회수준에서의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아니되며 남북한 구성원들 개개인의 삶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 2.3 통일사회에 대한 기대 인식

### 2.3.1 통일과 사회문제의 개선

통일에 대한 이익의 기대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비교하기 위한 문항인데, 2012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는 ‘부동산투기’와 ‘범죄문제’를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응답자들이 남한에 정착한지 오래지 않아서 문항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 조사에서 조사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네 가지였다. 일반적으로 남북분단 구조 속에서 남북한관계가 상호 통합을 위한 진전을 이뤄내다가도 다시 대립구도로 회귀하기도 하면서 문제들이 형클어지고 매듭지어지는 형국이었다면,<sup>5)</sup> 통일이 이러한 매듭을 완전히 풀어 줄 수는 없어도 그 가능성은 열어 줄 수 있기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후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할까? 표 2.3에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이들은 통일이 빈부격차 문제와 실업문제 해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북한에서 직장의 소속은 그대로 있으되 장사와 같은 비공식

4)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29-30.

5)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과주시: 창비, 2012).

표 2.3: 통일의 사회문제 개선의 기여도 (%)

	사회문제	크게개선	약간개선	차이없음	약간악화	크게악화	합계 (N)
2011	빈부격차	58.16	24.49	5.10	5.10	7.14	98
	실업문제	66.33	21.43	1.02	7.14	4.08	98
	지역갈등	28.42	25.26	12.63	20.00	13.68	95
	이념갈등	41.24	22.68	10.31	10.31	15.46	97
2012	빈부격차	55.65	24.19	7.26	7.26	5.65	124
	실업문제	61.79	18.70	9.76	4.07	5.69	123
	지역갈등	26.45	23.14	14.88	19.01	16.53	121
	이념갈등	36.07	17.21	14.75	18.85	13.11	122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통일이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즉 응답자들은 경제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이러한 사회문제의 개선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응답자들은 앞의 두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여도와 비교했을 때 통일이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의 해결에 기여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 지역갈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각기 33.68%와 35.54%였고, 이념갈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25.77%와 31.96%로 경제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은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의 지역갈등, 북한의 지역갈등, 남북한의 지역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랜기간 분단상태에서 형성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념적 갈등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6)</sup>

같은 질문에 대하여 2011년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실업문제가 25.5%, 이념갈등은 13.5%, 빈부격차는 13.1%, 지역갈등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통일이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응답은 빈부격차 70.6%, 이념갈등 70.1%, 지역갈등 67.8%, 실업문제 60.8%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한사회의 실업률 증가와 같은 이유로 팽배해진 경제적 위기감 속에서도 통일 이후

6) IPUS에서 실시한 입국년도를 기준으로 한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38.5%와 4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절반이상의 북한주민이 통일 이후 지역적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08-2011 세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발표자료집,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1년 8월 31일, p. 27.

북한지역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이 탈북자들보다 전반적으로 통일이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2.3.2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북한에서 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핸드폰이 보급되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남한의 방송을 접하고,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남한의 정보를 듣는다면 이들은 남한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다른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궁금증을 직접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러가지 대북정책이 통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2.4: 대북정책별 통일에의 기여도

대북정책	조사 년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계 (N)
인도적 지원	2011	58.10	10.48	22.86	8.57	105
	2012	44.35	20.97	19.35	15.32	124
사회문화교류	2011	52.53	31.31	13.13	3.03	99
	2012	44.26	36.07	13.93	5.74	122
경제협력	2011	54.46	24.75	13.86	6.93	101
	2012	49.21	33.33	15.08	2.38	126
정상회담	2011	52.00	26.00	18.00	4.00	100
	2012	53.23	26.61	16.13	4.03	124

표 2.4에 나타나듯이, 먼저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2012년에는 65.32%, 2011년도에는 68.58%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는 2012년도에는 80.33%의 응답자가, 2011년도에는 83.84%의 응답자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2012년도와 2011년 조사에서 각기 82.54%와 79.21%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2012년 조사에서는 79.94%의 응답자가 2011년 조사에서는 86.0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북정책별 통일에의 기여도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면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차례의 조사에서 인도적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전달이 된다면 좋지만,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2012년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남한주민들의 50.7%만이 인도적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한주민들 사이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규범적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분배체계의 투명성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논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2.3.3 통일 후 사회통합

통일은 분단체제 속에서 이질적으로 발전해 온 정치제도의 통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수준에서의 통일이 필요하고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생활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과연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탈북주민들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탈북자들이 남한정착 초기에 남한주민에 대한 강한 민족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sup>7)</sup> 이들은 남북한 주민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012년과 2011년에 각각 74.01%와 80.68%를 기록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표 2.5 참조).

표 2.5: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유대감 (%)

통일후 남북한주민 간의 유대감	조사년도	
	2011	2012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36.89	34.65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43.69	39.37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19.42	25.20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0.00	0.79
합계 (N)	103	127

7) 정은미·송영훈 (2011).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한 곳에 정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며, 다른 곳을 이주하였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도 남한에서의 생활이 풍요롭고 여유롭더라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마저 떨쳐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통일이 되었을 때 거주하고자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6: 통일 이후 거주 희망지역 (%)

통일 후 거주지역	조사년도	
	2011	2012
북한에서 살 것이다	28.85	32.28
남한에서 살 것이다	45.19	45.67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25.00	20.47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0.96	1.57
합계 (N)	104	127

표 2.6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 중 45%만이 통일 이후에도 남한에 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한 두명의 응답자들이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을 뿐, 약 29-32%는 북한에서 살 것이며 20-25%는 상황에 따라서 살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들이 아직 남한에 거주한지 1년이 안 된 이들이 대부분이므로 아직 북한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기에 충분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 2.4 요약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통일은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일이 북한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북한주민 대부분이 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실업문제와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은 통일 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양한 남한의 대북정책 중에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잘 어울려 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통일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서 살 의지가 있다.

## 제 3 장

# 주변국에 대한 인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3.1 머리말

2012년 조사에서는 2011년에 조사하지 않았던 북한주민들의 주변국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남과 북의 주변국은 시대를 달리하며 열강의 지위를 누려왔고, 지금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도 중국과의 혈명관계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과연 그들의 이웃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온 집체적 생활 모습만을 상정한다면 정부의 태도와 주민들의 의식이 궤를 같이 할 것 같지만, 북한사회도 집단행동과 개인의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면 정부의 태도와 주민들의 의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친근한 국가, 위협적인 국가, 그리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등과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 친근한 국가 vs. 위협적인 국가

#### 3.2.1 가장 친근한 국가

조사대상자들에게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북한주

민들이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중 경협 강화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중 관계의 역사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 혈맹관계 속에서 교육되어 온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국경에서 가까운 곳 거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경지역을 통한 접촉이 중국을 더욱 친하게 느끼도록 하였을 수도 있다.

표 3.1: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국가 (%)

친근한 국가	2012
미국	1.6
일본	0.8
남한	24.0
중국	70.4
러시아	3.2
합계 (N)	125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는 응답자의 재북학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들 중 남한과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이 46.15%로 같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학교 학력자들은 30:65,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은 19: 77 정도로 남한보다 중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처지가 다르고 주변국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친근한 국가와 재북학력 교차표 (%)

친근한 국가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무학
미국	0.00	0.00	1.23	25.00	0.00
일본	7.69	0.00	0.00	0.00	0.00
남한	46.15	30.43	18.52	25.00	50.00
중국	46.15	65.22	76.54	50.00	50.00
러시아	0.00	4.35	3.70	0.00	0.00
합계 (N)	13	23	81	4	2

노동당원과 비당원은 22:55, 24:72의 비율로 남한보다 중국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 당원 출신들 중에는 미국(5.56%), 일본(5.56%), 러시아(11/11%)를 친밀하게 느끼는 비중이 비당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 보

면, 사무원과 전문가 출신 응답자들은 다른 직종에 종사했던 이들보다 약 10% 높은 33% 정도의 응답자가 남한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외화벌이일군 3명 중 2명은 남한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남한주민의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16.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의 24.0%였던 것에 비하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9년과 2011년 사이는 15%와 16%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의 주민들은 각기 주요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이 통일의 파트너인 남과 북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 3.2.2 가장 위협적인 국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듯이 미국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22%나 되었던 점이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중국을 친밀하게 느끼는 북한주민들이 많지만, 경제 및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위협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표 3.3: 가장 위협적인 국가 (%)

위협적 국가	2012
미국	66.12
일본	3.31
남한	8.26
중국	22.31
러시아	-
합계	121

교육수준에 따라서 북한주민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와 인민학교 학력자들 사이에는 약 17%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다른 학력의 소유자들 보다 중국을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 5명 중 2명이, 외화벌이일군은 3명 전원, 전문가와

표 3.4: 위협적인 국가와 재북학력 교차표 (%)

위협적인 국가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무학
미국	58.33	68.42	68.29	75.00	0.00
일본	8.33	5.26	2.44	0.00	0.00
남한	8.33	5.26	8.54	25.00	0.00
중국	25.00	21.05	20.73	0.00	100.00
합계 (N)	12	19	82	4	2

사무원 출신의 응답자는 33%가 중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당원출신들 중에는 남한을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중 71%는 미국이, 29%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비당원들은 65%가 미국을 22%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가별 친밀도 분석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느끼는 위협도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도는 2010년까지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대북 위협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은 중국을 가장 한반도에 위협적인 국가로 꼽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2011년 조사에서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은 남한주민들은 33.5%에 이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친근하게 느끼는 국가와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응답의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한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자 27명 중 7명만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했으며, 14명은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친근하다고 응답한 85명 중 11명(13%)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남한과 중국을 친근하게 느끼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동북아 정치 지형에서 중국을 가장 남북관계 및 평화의 위협 국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118.

표 3.5: 교차분석표: 친근한 국가 &amp; 위협적인 국가

친근한 국가	위협적인 국가					합계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미국	1	0	0	1	0	2
일본	0	0	0	1	0	1
남한	7	2	4	14	0	27
중국	67	2	5	11	0	85
러시아	4	0	0	0	0	4
합계	79	4	9	27	0	119

### 3.3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미국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비슷하다.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고도 약 85%가 넘으며,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앞선 문항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표 3.6: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 (%)

응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매우 원한다	16.67	3.15	3.23	2.44
원하는 편이다	15.08	11.81	7.26	30.08
원하지 않는 편이다	21.43	40.16	30.65	37.40
전혀 원하지 않는다	46.83	44.88	58.87	30.08
합계 (N)	126	127	124	123

남한주민들은 2011년 조사에서 미국(38.1%), 러시아(13.4%), 일본(13.4%), 중국(9.4%) 순으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남북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의 희망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일본을, 남한주민들은 중국을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을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위하여 주변국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표 3.7에 나타나듯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를 넘고 있다.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통일과 주변국의 협조 (%)

주변국의 협조	2012
매우 필요하다	41.27
약간 필요하다	22.22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22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29
합계 (N)	126

학력별로 보면 고등중학교 출신 응답자의 58.5%가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다른 학력의 응답자들은 약 75%가 통일을 위하여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당원인 경우에는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9.9%였고 비당원인 경우는 67.8%가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과 재북학력 교차표 (%)

주변국의 협조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무학
매우 필요하다	38.46	56.52	36.59	50.00	50.00
약간 필요하다	38.46	17.39	21.95	25.00	0.00
별로 필요하지 않다	7.69	8.70	28.05	25.00	50.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38	17.39	13.41	0.00	0.00
합계 (N)	13	23	82	4	2

남한주민들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90.8%가 동의하였다. 각국별 응답을 보면 미국의 협조 필요성은 91.9%, 중국의 협조필요성은 84.6%, 일본의 협조 필요성은 71.6% , 러시아의 협조필요성은 72.3%의 응답자가 동의를 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의 남한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4 맺음말

북한주민들이 주변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조사는 시험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과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흥미로운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친근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 예상외로 많은 응답자들이 중국을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주변국관계의 인식이 집합적 사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학력수준, 직업, 당원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개인적 사고의 결과물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 데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학력과 직업, 당원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달리 평가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경계하고자 하는 의식이 남북주민들 모두에게 발견되고 있다. 즉 조사결과는 개인들의 주변국관계 인식은 정부간 갈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제 4 장

# 남한사회 적응실태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4.1 머리말

남한 땅을 밟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실태를 조사하는 것 탈북자 지원정책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초기정착과정에서 이들이 남한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이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의 대상들은 탈북을 하고 남한으로 온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나고 자란 북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의 일부라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조사를 기획하였다.

### 4.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의 차이만이 아니라 남북한주민 상호 간의 인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호인식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탈북자들이 남한주민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1)</sup>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2011년에는 91.3%가 친근하게 느껴

---

1) 정은미·송영훈 (2012), p. 243.

진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89.7%가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을 하는 등 북한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들어 올 때 남한주민에 대해 강한 민족적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

남한주민의 친근감	2011	2012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4.23	35.43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47.12	54.3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8.65	9.45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0	0.79
합계 (N)	104	127

하지만, 『2011 통일의식조사』의 남한주민의 반응은 탈북자들의 그것과 대조적이다. 남한주민 응답자의 41.05%만이 탈북자들이 친근하다고 하였으며 51.9%는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탈북자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답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의 약 61%는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주민들이 탈북자와 정서적 거리감의 차이가 있으나 상호접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렇지만, 북한주민의 민족적 동질의식은 남한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심리적인 좌절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기대와 다른 남한의 현실은 남한주민과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남한주민과 남한 사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포용적으로 비춰지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에는 약 70.6%의 응답자가 남한주민이 탈북자에 대하여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2011년도 조사보다는 약 5% 정도 감소하였다. 약 90%에 가까운 이들이 남한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있지만,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남한주민들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상의 학력자들은 23%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며, 전문학교 학력자는 34.8%가 고등중학교 학력자는 29.3%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직업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지만, 전문직 종사자 출신 및 장사 주업으로 삼았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

2) 정은미·송영훈 (2012), p. 244.

표 4.2: 남한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

남한사회의 포용성	2011	2012
매우 포용적이다	27.88	20.63
약간 포용적이다	48.08	50.00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23.08	27.78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0.96	1.59
합계 (N)	104	126

나고 있다. 당원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당원출신 중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5.6%이다.

표 4.3의 통계는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중 6명(13.6%)가 남한주민이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중 23명(33.3%)가 남한주민이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12명 중 5명(41.7%)은 남한주민들은 포용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한 명은 남한주민을 전혀 친근하게 느끼지도 않으며 남한주민들이 탈북자에 대해 전혀 포용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을 내 놓았다.

표 4.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 (%)

	매우 친근하다	다소 친근하다	별로 친근하지 않다	전혀 친근하지 않다
매우 포용적이다.	50.00	5.80	0.00	0.00
약간 포용적이다.	36.36	60.87	41.67	0.00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13.64	33.33	50.00	0.00
전혀 포용적이지 않다.	0.00	0.00	8.33	100.00
합계 (N)	44	69	12	1

탈북자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 하며,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응과정의 현실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들은 사회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

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3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의 만족도, 취업형태

탈북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남한에서의 사회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향을 떠났더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귀향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초기에는 북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를 앓고 살아가는 탈북자들은 어떤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표 4.4: 탈북자들의 자기정체성 (%)

자기정체성	2011	2012
나는 남한사람이다	74.29	64.29
나는 북한사람이다	20.95	30.95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76	4.76
합계 (N)	105	126

표 4.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에는 약 31.0%가 북한사람이라고 하였으며 64.3%가 남한사람이라고 하였다. 전문학교 및 대학교 이상 학력자는 평균 약 48%가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응답자들은 평균 72-75%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하였다. 정착초기지만 북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들 중 48%, 북한 소식을 가끔 접할 수 있는 이들 중 62.2%, 북한소식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이들 중 85.2%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동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간직하며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 중 81.8%가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평균미만인 55.1%만이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92%가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남한주민들이 다소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61.9%가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민족적 동질성과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만을 강조해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오롯이 통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조사의 결과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서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인식의 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5: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

생활의 만족도	2012
매우 만족한다	38.58
대체로 만족한다	33.86
보통이다	25.2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3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합계 (N)	127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의 기대감과 현실의 상실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남한에 살면서 평소에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깝게 어울리며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에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남한주민과 사회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과 달리,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비교했을 때 남한에서 정착초기에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은 탈북자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7명의 2.36% 뿐이었다.

표 4.6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응답자의 85.8%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3.15%만이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한에서의 높은 생활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정착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의 물질적 풍요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탈북자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가는 인간안보와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012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33.1%가 정규직 근로자였는데, 이는 2011년의 24.5%보다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의 비율도 약 5%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들의 학력별 취업형태를 보면 학력이 낮을 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별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대

표 4.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정책 만족도	2012
매우 만족한다	43.31
대체로 만족한다	42.52
보통이다	11.0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1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합계 (N)	127

표 4.7: 남한에서의 취업형태 (%)

취업형태	2011	2012
정규직 근로자	24.47	33.06
계약직 근로자	4.26	1.65
일용직 근로자	11.70	4.96
고용자	1.06	0.00
자영업자	3.19	2.48
실업자	3.19	8.26
비경제활동인구	52.13	49.59
합계 (N)	94	121

학교(90.9%), 전문학교(57.1%), 그리고 고등중학교(44.4%) 순이다. 남한사회의 고학력 실업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고학력 탈북자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향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북한에서 전문직 종사자 중 75%, 농민 중 70%, 사무원 중 60%가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반면 외화벌이일군 중 33.3%와 장사를 했던 이들 중 38.5%만이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북한에서 장사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보다 약 7%가 더 많았다. 그렇지만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비율의 탈북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취업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을 기대되지만, 북한에서의 장사경험이 본인의 직업활동 이외의 가계수입을 위한 생계형이었다면 남한사회에서 취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4.4 맺음말

2011년과 2012년의 두 조사 모두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는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끼며 남한주민이 탈북자에 대하여 포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만큼 남한사회가 그들에게 포용적이라고 느껴 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포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탈북자일수록 북한주민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또한 초기 정착과정에서 북한의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주민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편, 초기 정착과정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생활환경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인 만족감이 장기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남한주민의 포용적 태도가 확산되고 탈북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사회 변화 실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 5.1 열며

금년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관계의 사건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북한 내 불안정성과 긴장감을 높여주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김정은이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하며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느껴진 반면, ‘태양절’ 100주년 때 보여준 김정은의 공개 발언이나 과감한 현지지도, 부인 리설주의 파격 등장 등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신선한 감흥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2월 극적으로 타결되었던 북미회담은 6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으나 북한의 광명성 로켓발사로 이러한 분위기는 곧 사라지고 국제사회의 제재논의와 갈등 국면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남북관계는 작년의 ‘사격표적지’ 문제로 전면 대결로 치달은데 이어 금년에도 군부대 내의 적대적 ‘구호’가 보도되면서 치열한 심리전과 설전으로 점철되었다. 북한은 인민군 실탄사격훈련을 외신기자들에게 공개하고 남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름이 새겨진 표

적에 사격하는 장면을 내보냈고,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응징하겠다는 반격을 가했다. 남북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고 냉랭하게 얼어붙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과 불안이 지난 1년을 압도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 진행되었던 남북자 송환 요구와 북한 인권실태 폭로 등 북한인권과 탈북자 소식도 국민들의 통일의식 형성과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상황 못지 않게 남북자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실태 관련 보도들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식 및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 내 구금 소식과 탈북자의 평양 귀환 기자회견 등의 사건들도 주변국 인식과 탈북자 문제를 환기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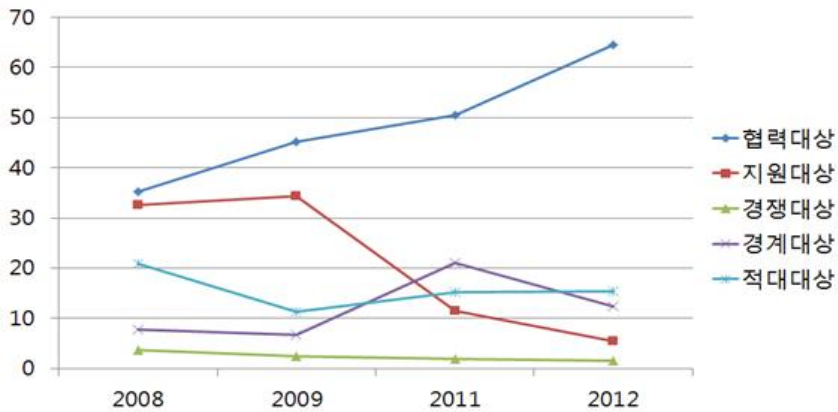
## 5.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5.2.1 남한의 존재: “남한은 북한에 어떤 대상인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은 북한에 어떤 대상인가?”라고 묻고 협력대상, 지원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대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4.6%로 가장 많았고 ‘적대대상’ 15.4%, ‘경계대상’ 12.3%, ‘지원대상’ 5.4%, ‘경쟁대상’ 1.5%가 뒤를 이었다. 최근 몇 년간 남북한이 치명적인 무력충돌과 전쟁위협, 심리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은 남한을 여전히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2008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북한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남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남한의 경제발전 소식이 북한 내에 어느 정도 알려짐에 따라 남한이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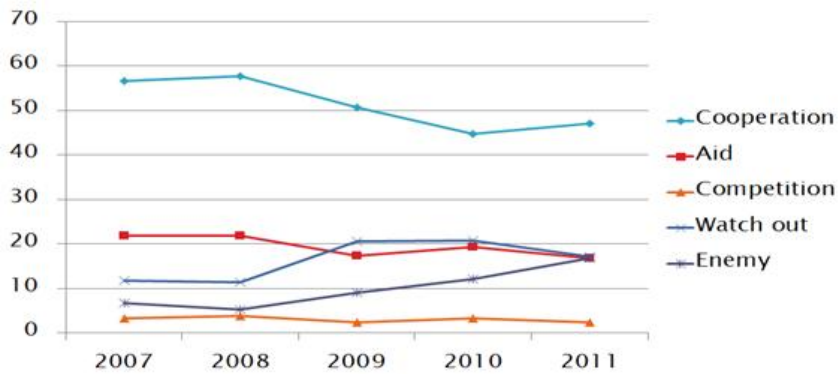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현상은 그림 5.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년에는 2011년과는 달리 남한에 대한 ‘적대대상’ 인식이 ‘경계대상’ 인식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에 북한주민들의 대남 경계인식이 급속히 높아졌으나 2012년에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적대대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이러한 대남인식의 지형과 변화의 추세는 남한주민의 대북인식과 매우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에서 ‘협력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47%로 가장

그림 5.1: 북한주민의 남한존재 인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생각은 지난 4년 사이에 5-6%에서 1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5.2: 남한주민의 북한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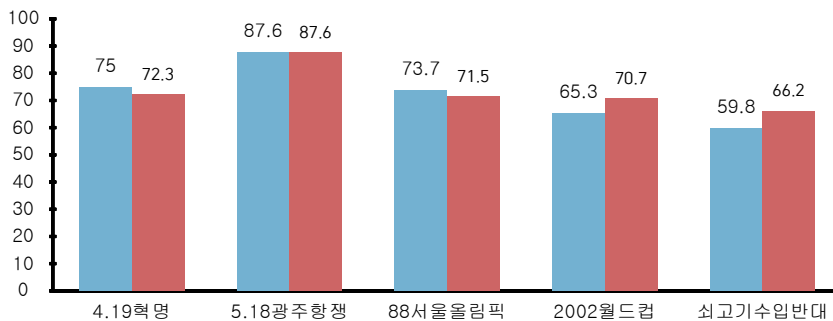


최근 들어 남북한 상호간에 적대의식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적대의식이 완화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대립각을 세우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설전을 벌이는 동안 사회구성원들도 적대적 상호의식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다수는 여전히 서로를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북한 당국이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국민들의 생각을 공존과 상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적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 5.2.2 대남 인지도: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5.3은 2011-2012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시기별로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1980년 5.18 광주항쟁(87.6%)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9 혁명(72.3%)과 88서울올림픽(71.5%), 2002 월드컵(70.7%),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66.2%) 등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앞의 항목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봄과 동시에 남한을 5.18 광주항쟁과 4.19 혁명으로 연상하고 있음을 보면 주민들의 의식은 남한주민들의 5.18 항쟁과 4.19 혁명의 정신을 지원하고 협력하되 남한의 현 정부는 타도해야 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에서도 북한을 정권과 주민으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곤 하는데 북한도 주민들에게 남한의 현 정부와 주민을 분리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동포적 협력의 대상으로, 정권에 대해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sup>1)</sup>

그림 5.3: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



2012년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 평균은 70.8%였다. 이는 작년의 72.3%에서 1.5% 낮아진 것이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를 남한주민의 대북인지와 절대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남한주민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2011년 평균 인지도가 60.6%로 북한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1) 『민중조선』 “광주항쟁정신 계승! 공안탄압분쇄! 이명박정권 퇴진!” 2009년 5월 19일; 『민중조선』 “자유와 광주 만세!” 2010년 5월 18일; 『민중조선』 “5.18의 정신을 이어” 2011년 5월 18일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 (2012년 상반기), pp. 125-126 재인용).

(83.2%)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천리마운동(74.4%), 아리랑축전(64.4%), 고난의행군(59.7%), 선군정치(58.8%), 장마당(39.1%) 순으로 알고 있었고 평균인지도는 60.6%였다.<sup>2)</sup>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지도가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대남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에 대한 사실을 각각 72.3, 71.5%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이 공식매체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2.3 남북간 차이 (이질성)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2년의 경우, 선거방식에서는 95.4%, 생활수준에서는 94.7%, 역사인식은 92.3%, 언어사용은 95.4%, 생활풍습에서는 83.1%, 가치관에서는 86.9%가 남북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한과의 이질성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차이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간의 이러한 이질성은 남한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는 2011년에 남북간의 선거방식(93.9%), 생활수준(96.6%), 역사인식(88.3%), 언어사용(90.7%), 생활풍습(88.3%), 가치관(93.6%)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들이 조금 다르게 느끼는 부분은 북한주민들이 역사인식과 언어사용 부분에서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와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남한주민들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역사인식과 언어사용에서 북한주민들이 남북간의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가치관 측면에서는 남한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덜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5.2.4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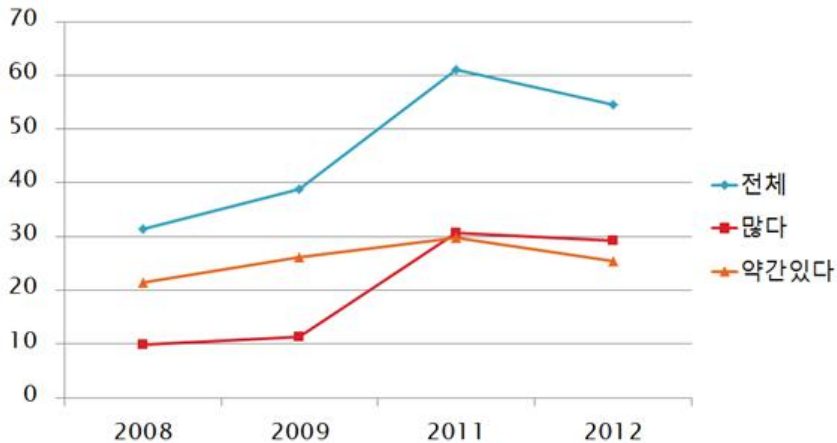
####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29.2%), '약간 있다'(25.4%)를 합하여 54.6%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31.4%에서 2009년 39.1%로 증가했고 2011년에 61.1%로 급증하였으나 2012년에는 54.6%

2) 박명규 외,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62.

로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44.7%)는 응답보다는 ‘있다’(54.6%)는 응답이 많았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고조되었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긴장과 대립의 기운이 다소 누그러진 듯 보인다.

그림 5.4: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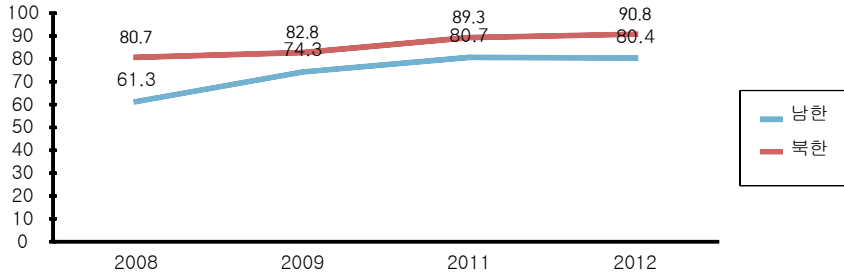
이는 남한주민의 안보불안 의식과도 비슷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이후 52.2%(08년)→63.6%(09년)→67.3%(10년)→78.3%(11년)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남한주민의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가 2012년에 68.9%로 다소 완화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북핵위험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17.7%는 “다소 위협적일 것”이라고 답하여 90.8%가 ‘위협적일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작년의 89.3%과 거의 유사한 수치로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남한주민들이 북한 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80%)보다 10.4% 포인트가 더 높은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더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핵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핵보유를 대남

및 대미의 방어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설득기제를 통해 교육하고 학습한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그림 5.5: 북핵위협의식 (남북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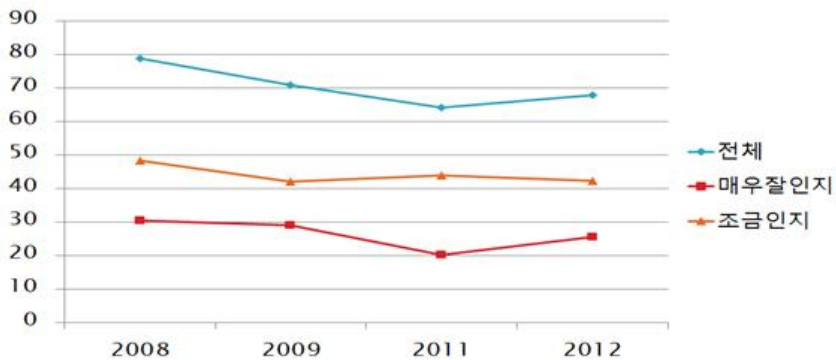
### 5.2.5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 대북지원 인지도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5.4%), ‘조금 알고 있다’(42.3%)를 합하여 총 67.7%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23.8%),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7.7%)를 포함하여 총 31.5%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7.7%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는 비율이 약 68:32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2008년의 78.8%에서 2009년 70.8%, 2011년 64.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2년에 67.7%로 소폭 상승하였다. 최근 4-5년 동안 대북지원 인지도의 전반적 하락은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관련 활동이 감소한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북지원 활동이 실제적으로 중단되고 교류와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 (2012년 상반기), pp. 118-119 재인용.

그림 5.6: 대북지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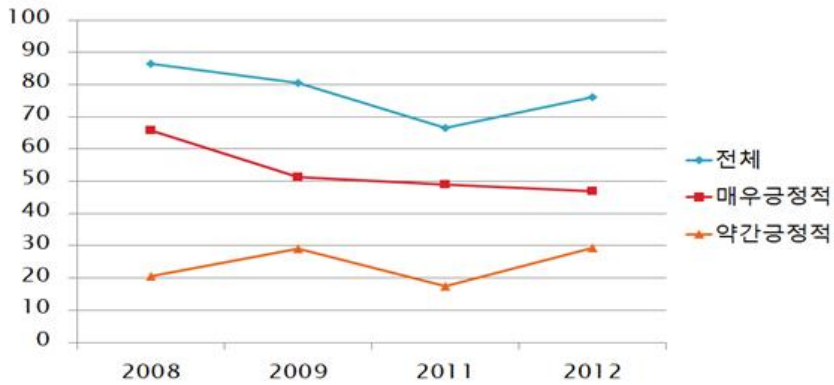
###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6.9%로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3.0%로 매우 적었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6.9%,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9.2%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강한 긍정성을 띠고 있었다.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북지원 무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논리로 대북지원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대북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보면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3%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0%였는데 1년 사이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9.6% 늘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가 줄어들었다. 지난 몇 년간의 추이와는 달리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가 ‘긍정’ 쪽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대북지원 정책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응답의

그림 5.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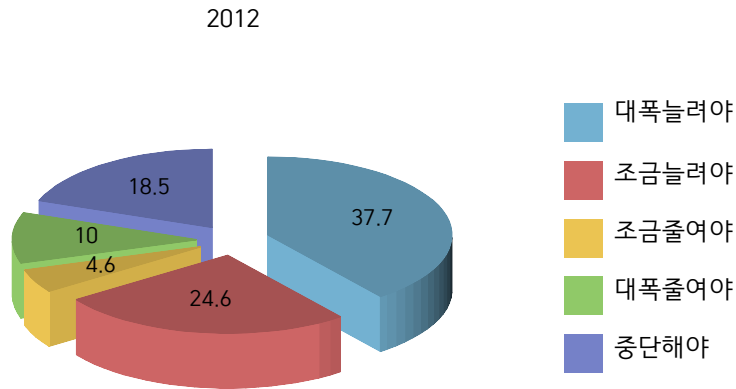


비율은 62.3%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14.6%,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18.5%로 나타나 북한주민들 가운데 대북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62:33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중단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1.2%→62.3%로 8.9%가 줄었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6.3%→14.6%로 낮아진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부정적 의견이 12.5%→18.5%로 6%가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주민들 가운데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여론이지만,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여론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변화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2011년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3.4%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56.4%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13%나 많았다. 또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9.8%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22.3%)보다 17.5%나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비판적 의견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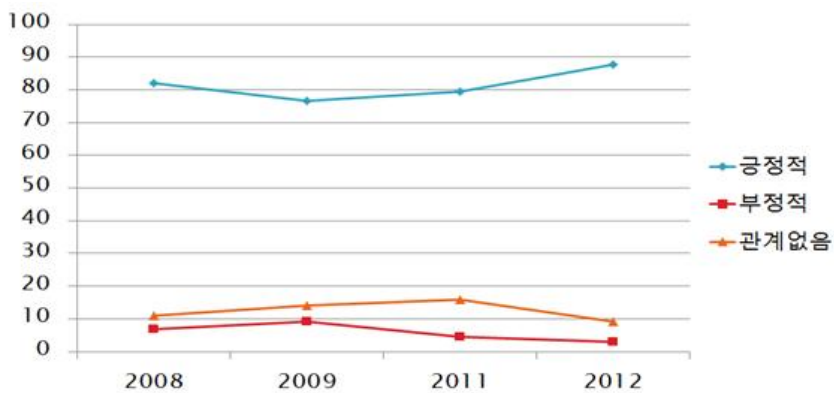
그림 5.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68.5%)와 ‘약간 긍정적’(19.2%)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은 3.1%로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9.2%가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경제투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5.9: 대북경제투자자에 대한 인식



## 5.3 북한사회 변화실태

### 5.3.1 경제활동

#### 적정소득과 실재소득

한 달 생활비로 적정한 소득으로는 30 만원 정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2012년 북한주민들의 공식소득은 평균 1,400 원이었으며 2011년의 1,200 원에 비해 200 원이 늘어났다. 비공식 소득의 평균은 2012년에 100,000 원으로 2011년의 25,000 원에 비해 4 배가 증가하였다.

공식월급이 100 원이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8년에 22.0%에서 2009년 23.2%로, 2011년에는 38.6%로 급증했고, 2012년에는 27.7%로 다소 줄어들었다. 공식월급이 아예 없다고 답한 사람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6.3%, 26.9%나 되었다. 빈민층이 2011년에 급증했다가 2012년에 다소 줄어든 것이다. 비공식 월급에서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2011년에 17.1%, 2012년에 16.5%나 되었다. 절대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비공식적으로 10 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2012년에 46.5%나 되었다.

#### 장사활동

비공식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장사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56.8%(2008년)→66.7%(2009년)→69.3%(2011년)→69.2%(2012년)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약 70%의 응답자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직업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사는 이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비공식 수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에서 지난 5년간 장사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사회에 장사 등의 사적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장사경험의 유무, 2008 2012 (단위: 명(%))

장사경험	2008	2009	2011	2012
있다	168(56.8%)	206(66.7%)	79(69.3%)	90(69.2%)
없다	112(37.8%)	154(41.6%)	31((27.2%)	39(30.0%)
무응답	16(5.4%)	10(2.7%)	4(3.5%)	1(0.8%)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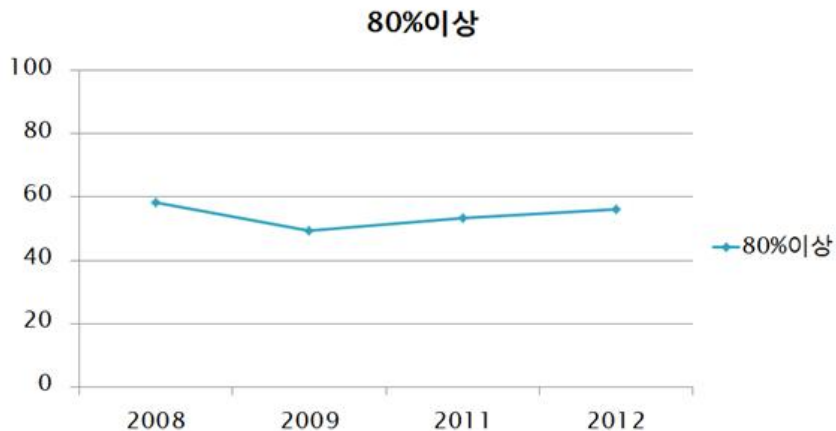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표 5.2: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개인사업자의 비중

	2008	2009	2011	2012
10% 미만	0(0.0)	7(1.9)	2(1.8)	2(1.5)
20%	3(1.0)	7(1.9)	2(1.8)	2(2.3)
30%	13(4.4)	15(4.1)	9(8.0)	7(5.4)
40%	11(3.7)	19(5.1)	5(4.5)	5(3.8)
50%	18(6.1)	42(11.4)	7(6.3)	6(4.6)
60%	26(8.8)	42(11.4)	13(8.9)	19(14.6)
70%	47(15.9)	46(12.4)	14(13.4)	15(11.5)
80%	91(30.7)	108(29.2)	24(21.4)	39(30.0)
90% 이상	82(27.7)	75(20.3)	36(32.1)	34(26.2)
무응답	5(1.7)	9(2.4)	2(1.8)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북한주민들의 장사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북한주민들의 80%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56.2% 나 되었다.

그림 5.10: 80% 이상이 장사한다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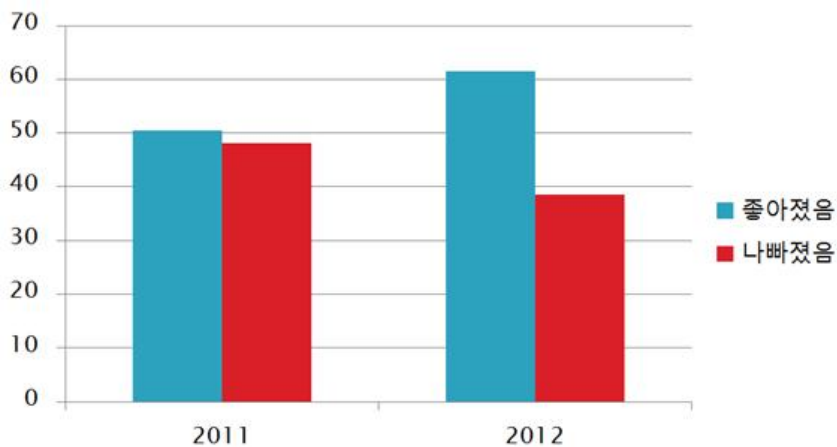


### 생활수준의 양극화

북한 주민생활의 실태를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200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61.5%, '나빠졌다'는 응답이 38.5%로 견해가 나뉘었다. 2011년에는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각각 49.1%, 50.9%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2012년에는 '나빠졌다'는 사람보다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반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생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38.5%의 주민들은 여전히 가장 비참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생활여건이 더 나빠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2년에 생활수준이 좋아진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나 빈부격차의 심화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11: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이러한 분석은 최근 한국사회에 북한 식량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최근 남한사회 내에 북한 식량난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한데,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북한사회의 양극화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4)</sup> 보수세력은 최근 방북자들의 관찰을 예로 들며 북한 전반에 활력이 넘치며 차량도 많아졌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가 하면, 진보세력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국내 NGO의 보고서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식량난 악화와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4)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 변화: 2008-2011,” 『현대북한연구』 15 권 1호 (2012), pp. 5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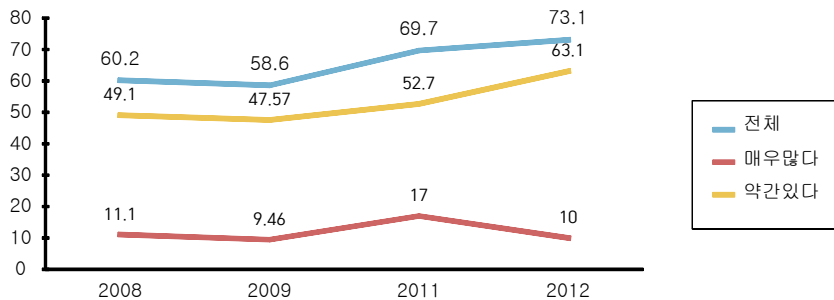
이러한 평가가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된 것 같지만, 최근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양측의 평가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3.2 정치적 비판행위와 사회통제

#### 정치적 비판행위

그림 5.12는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최근 연간에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간 있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다. ‘매우 많다’와 ‘약간 있다’ 등 ‘있다’는 응답은 60.2%(08년)→58.6%(09년)→69.7%(11년)→73.1%(12년)로 증가한 반면, ‘대체로 없다’와 ‘전혀 없다’ 등 ‘없다’는 응답은 39.8%→41.4%→30.3%→25.4%로 감소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가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없다’는 의견이 25-30%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는 의견 가운데도 ‘매우 많다’는 의견(10%)보다는 ‘약간 있다’(50-60%)는 쪽에 많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보면 아직 북한 내에 정치적 비판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만큼 많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5.12: 정부비판행위, 2008 2012 (단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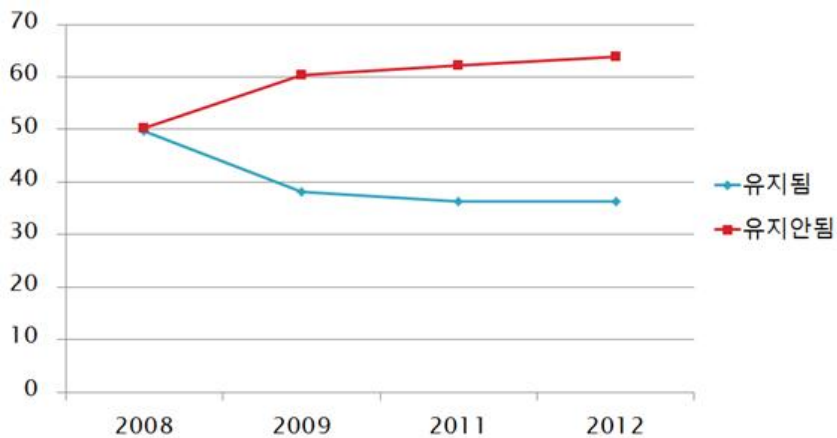


#### 전반적 사회통제

위에서 설명한 정부비판행위의 증가는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49.8%(08년)→38.7%(09년)→37.2%(11년)→36.2%(12년)으로 감소

한 반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08년)→61.2%(09년)→62.8%(11년)→63.8%(12년)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2009년 사이에 사회통제가 10% 포인트 정도 약화된 이후 2009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009년부터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경제적 동원과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13: 사회통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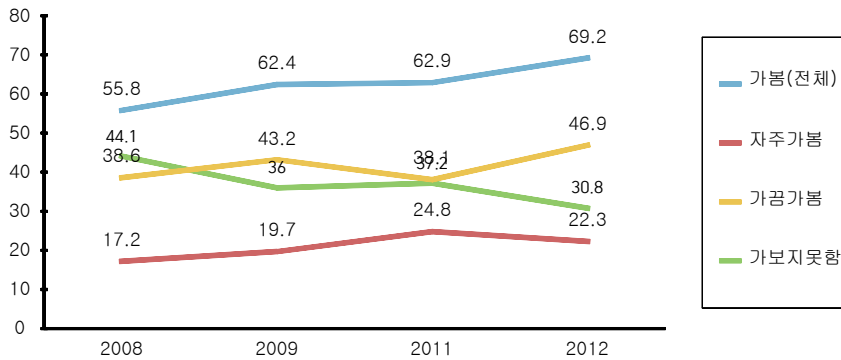
### 지리적 이동

주민 유동성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 군, 구역 단위로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sup>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주민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폐쇄체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단초가 된다. 아래의 그림 5.14은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이 17.2%(08년)→19.8%(09년)→24.8%(11년)→22.3%(12년)로 증가하고 있고, ‘거의 가보지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1%(08년)→36%(09년)→37.2%(11년)→30.8%(12년)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유동성이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5)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그림 5.14: 타지역 이동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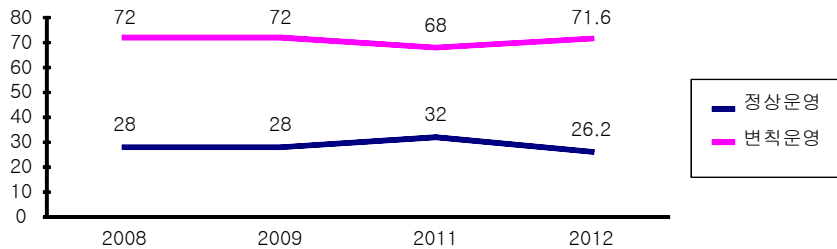
보인다.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중국 등 해외거주 가족 및 친인척 방문도 장려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은 152,300 명으로 2010년에 비해 31%가 증가하였다.<sup>6)</sup> 중국 방문자들 가운데 체류기간을 어기고 수개월 혹은 1년씩 귀국하지 않는 북한주민이 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보위부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유동인구의 증가는 정보유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요소다.

### 직장 내 생산규율

그림 5.15는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지켜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생산규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약 25-30%인 반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를 기록하여 직장의 생산활동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기초해 볼 때 직장의 생산규율이 30% 정도 유지되고 있고 70%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이러한 변칙적 생산활동은 경제침체와 식량난 때문에 어느 정도 고착화 내지 유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5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규율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28%(08년)→28%(09년)→32%(11년)→26.2%(12년)로 변화하였는데, 2011년에 생산규율이 조금 올라간 것은 2009년에 북한당국이 대대적으로 전개한 150일전투, 100일전투 등의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6) 『연합뉴스』, 2012.2.10.

그림 5.15: 직장 내 생산규율, 2008-2012 (단위: 백분율(%))



### 생활총화 출석

그림 5.16은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간 생활총화의 참가 실태를 보여준다. 2012년의 경우 생활총화 참여는 70%-90%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고, 50% 70%라는 응답은 23.8%, 90% 이상이라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50 70%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70% 90%라는 응답이 23.7%로 적어 주민들의 생활총화 참여율은 1년 사이에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평가는 생활총화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음을 보여주지만 ‘90% 이상’이라는 최상의 응답은 작년의 17.5%에 비해 올해는 13.8%로 조금 낮아졌다. 이 문항은 2011년에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항목으로 과거 통일연구원의 자료<sup>7)</sup>에서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26.0%(08년), 16.2%(09년), 19.5%(10년)로 조사된 점과 비교하면 17.5%(11년), 13.8%(12년)로 생활총화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 5.3.3 문화의식

#### 집단/개인 주의

그림 5.18이 보여주듯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가치는 20:80으로 집단주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추세는 작년까지 집단가치보다 개인가치 우선의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그 추세가 멈추고 집단주의 가치가 조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08년 26.7%에서 2009년 20.4%로 감소했고 2011

7) 통일연구원 자료는 2010년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탈북자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그림 5.16: 생활총화 출석률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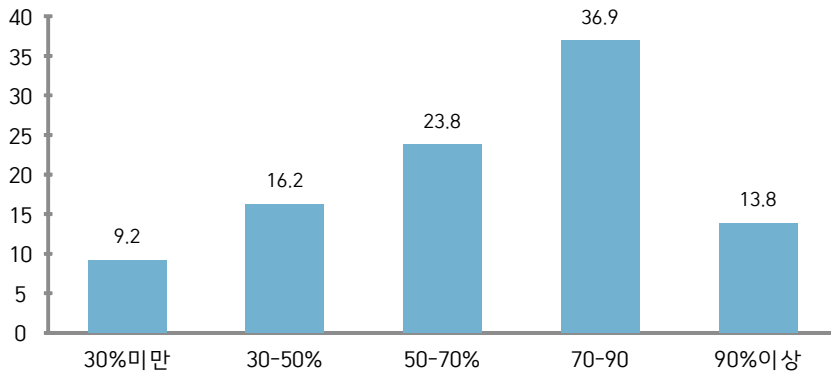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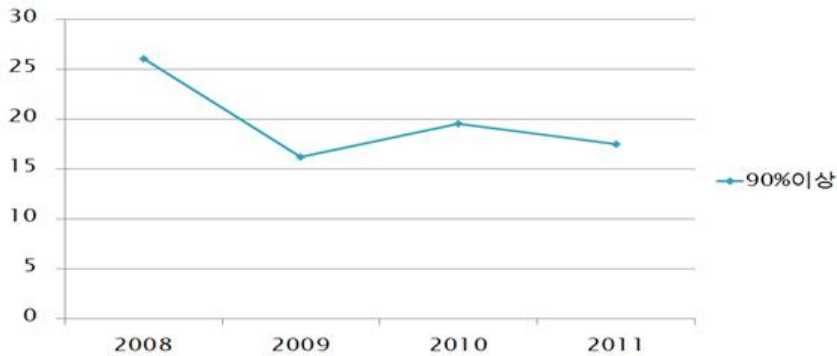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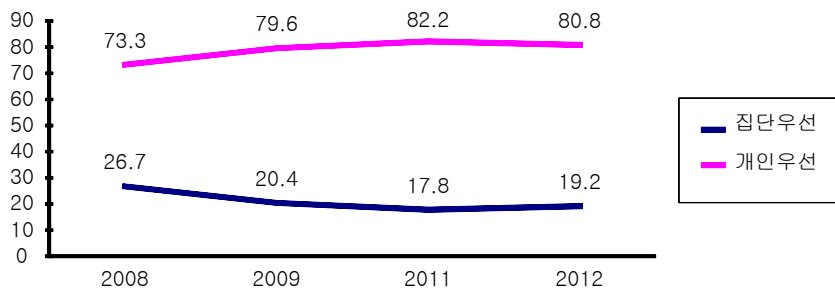


그림 5.17: 생활총화 출석률 90% 이상이라는 응답자 (%)



년에 17.8%로 낮아졌다가 2012년에는 19.2%로 약간 상승하였다. 반면, 개인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2008년 73.3%에서 2009년 79.6%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82.2%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80.8%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림 5.18: 개인/집단 우선 가치, 2008-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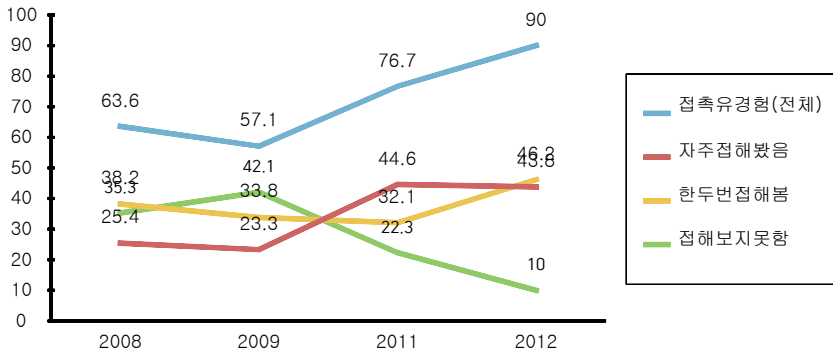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개인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으로 생존을 위한 개인사업 및 장사 인구가 늘고 주민 유동성과 정보유통이 증대함으로써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강조했던 집단주의 가치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사이에 그러한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이 조직활동과 정치사회적 교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류 접촉

그림 5.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63.6%(08년), 57.1%(09년), 76.7%(11년), 90.0%(12년)로 지난 1년 사이에 남한문화의 접촉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반면 ‘접해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35.3%(08년)→42.1%(09년)→22.3%(11년)→10.0%(12년)로 급감하여 최근 연간에 한류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이처럼 ‘한류’의 접촉 경험이 급증한 것은 중국과의 인적, 물적 접촉과 교류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한 해 동안 북중간 교역(남북교역 제외)이 41억 7천4백만 달러에서 63억 1천6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21억 4천 2백만 달러가 증가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즉 2008년 38억 1천 6백만 달러에서 2009년 34억 1천 4백만 달러로 감소하다 2010년에 41억 7천 4백만 달러로 122%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 150%의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북중간 교역과 왕래가 급증하면서 외부문화의 유입도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사이에 사회적으로는 조직생활과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거래와 문화접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후 북한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5.3은 약 70~80% 정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과 2009년에 67.9%, 61.9%의 탈북자들이 북한소식을 접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접촉 비율이 71.1%, 79.3%로 증가하여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듯이, 예전에는 인적왕래에 의한 소식전달이 주를 이루었었지만 근래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한 소식전달 현상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2월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대수가 2008년 12월 개통 이후 3년만에 100만대

그림 5.19: 한류접촉경험, 2008-2012 (%)



를 돌파했다.<sup>8)</sup> 여기에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탈법적인 중국의 휴대전화까지 합하면 정보유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 가운데 남한에 친척이 있는 비율이 30%(08년)→40%(09년)→56%(11년)→62.3%(12년)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북한의 문화접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2012 (명, %)

	2008	2009	2011	2012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15.2)	46(12.4)	19(16.7)	27(20.8)
조금 접할 수 있다.	156(52.7)	183(49.5)	62(54.4)	76(58.5)
거의 접할 수 없다.	86(29.1)	122(33.0)	30(26.3)	27(20.8)
무응답	9(3.0)	19(5.1)	3(2.6)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 5.3.4 정치사상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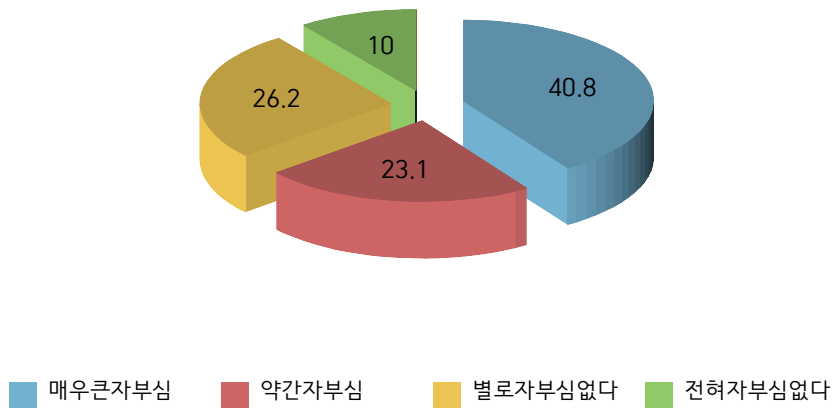
### 5.3.5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그림 5.20은 주체사상 이념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체사상을 자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약 64%로 ‘없다’는 응답률 36%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63.7%(08년)→

8) 『통일뉴스』, 2012.2.4.

54.8%(09년)→ 59.8%(11년)→ 63.8%(12년)로 2009년에 약간 낮아졌으나 2011년에 다시 회복하여 64%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약 80%의 수준을 유지하던 1994년과 비교하면 20%가 낮아진 것이지만,<sup>9)</sup> 최근 몇년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사상의식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과 반대로 ‘전혀 자부심이 없다’는 응답이 10%로 낮다는 점이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최근 연간에 급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사상학습과 선전선동부의 활동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0: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008-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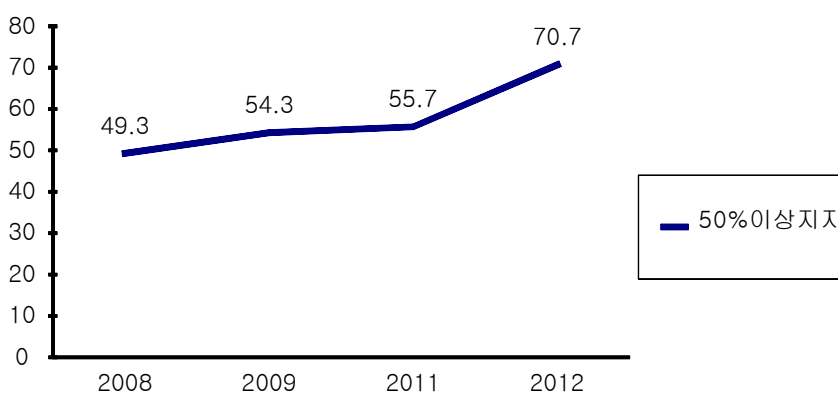
### 김정일지지도

그림 5.21은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지지도를 보여준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49.3%(08년)→ 54.3%(09년)→ 55.7%(11년)→ 70.7%(12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지도가 최근 5년간 증가한 이유는 건강이상에 따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동정심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2008년 8월 건강

9)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1994).

악화 이후 3개월 만에 여윈 모습으로 등장한 장면을 보면서 주민들의 동정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 5월과 8월의 중국방문, 2011년 5월과 8월 중국 및 러시아 방문에 대한 보도를 접함으로써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식의 심리적 선전효과가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1: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2008-2012 (%)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과도한 군사비 지출(2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하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과 개혁개방 부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8%를 차지했다. 작년까지는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하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26%를 차지했는데 2012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26%→21%로 줄어든 반면 ‘과도한 군사비’와 ‘개혁개방 부재’라는 응답이 늘어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악화에 따른 동정심리가 작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군사비 부담에 대한 대주민 선전활동을 전개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때문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의식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으로 보는 사람은 3.9%(08년), 2.3%(09년), 3.6%(11년), 3.8%(12년)로 매우 낮으며 최근 5년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sup>10)</sup> 15년 전인 1998년에도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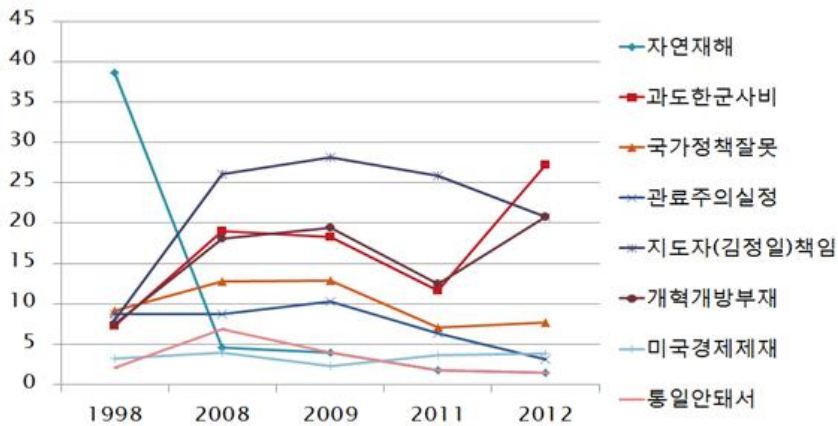
10)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를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표 5.4: 북한의 경제난 원인, 1998, 2008 2012 (복수응답허용, %)

원인	1998*	2008	2009	2011	2012
자연재해	805(38.6)	26(4.6)	24(3.9)	2(1.8)	-1.5
과도한군사비	153(7.3)	107(19.0)	112(18.3)	13(11.6)	-27.2
잘못된 국가정책	190(9.1)	72(12.8)	79(12.9)	8(7.1)	-7.7
관료주의 실정	181(8.7)	49(8.7)	63(10.3)	7(6.3)	-3.1
지도자의 책임	168(8.0)	147(26.1)	172(28.1)	29(25.9)	-20.8
개혁개방 부재	156(7.5)	102(18.1)	119(19.4)	14(12.5)	-20.8
미국 경제제재	67(3.2)	22(3.9)	14(2.3)	4(3.6)	-3.8
통일 안돼서	43(2.1)	39(6.9)	24(3.9)	2(1.8)	-1.5
결측	138(6.6)	-28.9	-28.9	33(29.5)	-
합계	2,088(100.0)	564(100.0)	612(100.0)	112(100.0)	130(100.0)

\*, 1998년 자료는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1998년 자료에서는 응답항목 중 ‘경제개발을 하지 않아서’ 83(4.0%), ‘비료농약부족’ 104(5.0%)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 표에 통합하기 어려워 열거하지 않았음.

그림 5.22: 북한의 경제난 원인, 1998, 2008 2012 (복수응답허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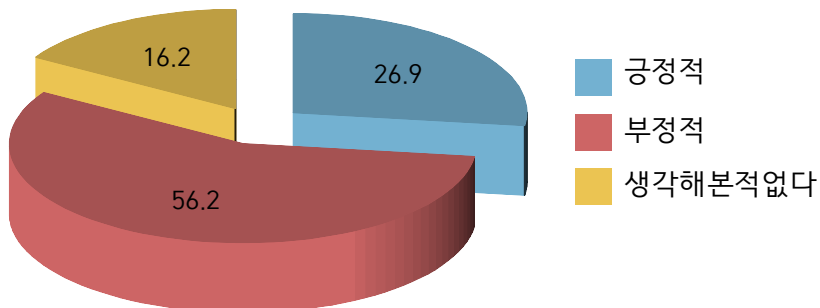


제제재로 돌리는 북한주민은 3.2%로 극히 작았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비중이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는 정당화 논리가 실제 북한주민들의 의식형성에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행적인 정치수사의 담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후계자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이 56.2%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은 26.9%,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16.2%가 되었다. ‘긍정적’ 또는 ‘생각해본적 없다’는 의견을 합하면 43.1%로 ‘부정적’이라는 응답(56.2%) 보다는 적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야할 부분이다. 최근 방북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현지도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거침없는 행동에 대해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담론이 선전선동부의 치밀한 선전활동에 의한 것이겠지만 ‘후계자’라는 용어가 ‘3대세습’을 연상하는 부정적 의미를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조사부터 ‘후계자’라는 용어 대신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를 직접 물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운 항목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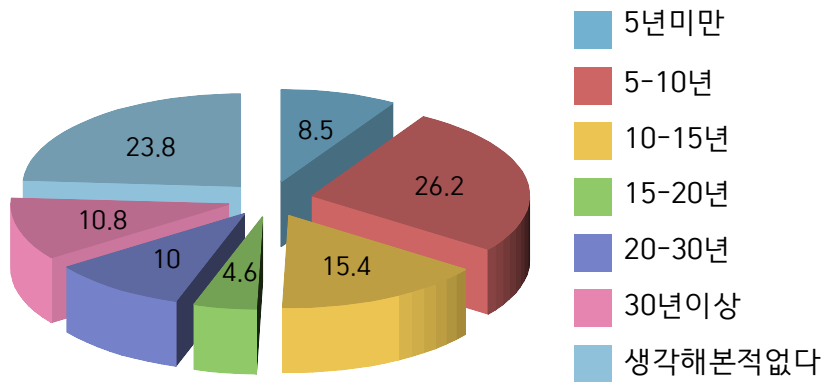
그림 5.23: 후계자 지지도 (%)



###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0년’이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3.8%는 ‘생각해본적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림 5.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을 모두 합하면 40.8%나 된다. 반면 ‘5년 미만’이라는 의견은 8.5%에 불과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5.24: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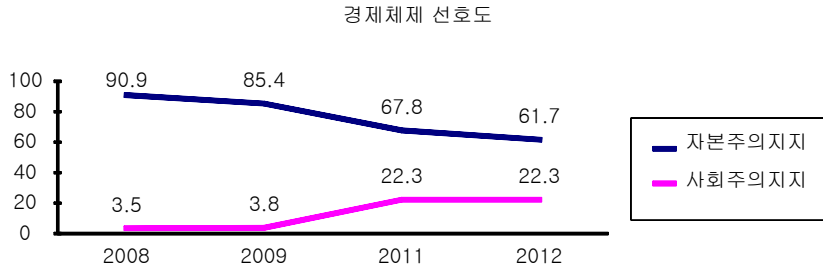


### 경제체제지지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결과 그림 5.25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략 62:22로 자본주의지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5년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2010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최근 5년간 3.5%(08년)→ 3.8%(09년)→ 22.3%(11년)→ 22.3%(12년)로 2011년에 급상승한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0.9%(08년)→ 86.5%(09년)→ 67.8%(11년)→ 61.7%(12년)로 크게 낮아졌다.

그림 5.25: 경제체제 선호도 (%)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북한 경제가 국가적인 투자와 자원으로 일정부분 활성화 되간다는 의미이고,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한 공급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보다 노동력을 대가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호할 것으로 짐작된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시장 활동의 증가로 주민생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불안 상황에서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4 닫으며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남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있으나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적대대상이라는 의식이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 남한의 대북도발에 대한 불안의식이 감소하면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대폭 상승하였다. 남한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식매체 이외에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핵의 위력이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높을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비교해 보면 남북간 이질성 인식의 수준이나 신뢰감, 상호 인식의 시기별 추이 등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대상 인식에서, 그리고 무력도발 가능성에서 북한 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탈북자 샘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함인지 실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상호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

북한주민들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실태는 비공식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통제는 전반적으로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나 정치적 비판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총화 참여나 직장 내 생산규율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보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한류의 접촉경험이 지난 1년 사이에 13%가 늘어난 것인데 이는 북중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류의 접촉 경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이 지난 1-2년 사이에 완만한 이완 내지 정체 또는 재정비되는 현상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통제와 집단주의 문화, 사회주의 체제지지 등 여러 항목에서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 비정상적 형태의 주민생활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더욱이 정치사상의식 측면에서는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점증하는데다 김정일 지지도는 작년 1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배경에는 지난 1-2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 김정은 체제로의 정비, 북중관계의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와 이를 정당화하는 당국의 설득의 기제가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분석에서는 시간에 쫓겨 각 항목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찬찬히 살펴볼 수 없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 전반을 성, 연령, 학력,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의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샘플규모가 워낙 작고 지역적으로 함경북도와 자강도로 편중되어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작년의 사례를 근거로 보면 연령과 학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샘플에서 오는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탈북자 샘플 중에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지지도, 주체사상 자부심 등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제 2 편

# 북한 정치사회 변동



## 제 6 장

# 2012 북한사회의 의식주 기초실태

정은미 (IPUS HK 연구교수)

### 6.1 조사의 목적과 설문문의 구성

북한사회의 안정성/불안정성 또는 북한체제의 변화론/불변론은 북한연구에서 자주 마주치는 논쟁담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점들은 권력구조의 변화, 파위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분석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사회의 미시 연구나 일상생활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앙리 르페브르(H. Lefbvre)가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체제의 변화 또는 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회 안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일상성을 지속 시키지 못할 때이다.<sup>1)</sup> 또 경제적 토대와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상부구조만으로 삶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역동성을 상쇄하는 도식일 수 있다.<sup>2)</su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IPUS)이 올해로 처음 실시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체제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체적인 실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사회변동조사를 통해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정권의 안정/불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와 정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갈지를

1)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2005), pp. 90-91

2) 위의 책, p. 66.

객관적으로 평가,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작업은 또한 우리가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찾는 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사회변동조사의 설문지는 크게 북한주민의 의식주 실태,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시장경제화의 실태, 사회의 개방성,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형식은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 또는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됨으로써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응답자 자신 또는 일반 북한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려 하였다.

표 6.1는 설문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전체 설문 내용 중에서 북한사회의 식의주 실태와 계층 구성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다룬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 설문지의 내용 전개가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주민에게는 식의주 표현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84년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먹는 문제가 입는 문제에 우선함을 지적하며 의식주 대신 식의주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제시했던 지상낙원으로서 북한의 미래 모습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것’으로 식의주 순서였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문헌에 의하면 2002년 9월 28일 김정일이 기존의 식의주 용어를 다시 의식주로 고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sup>3)</sup>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 북한주민들의 삶에서 여전히 입는 문제보다는 먹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지 구성에서도 먹는 문제를 입는 문제보다 앞서 배치하였다.

## 6.2 북한사회의 식의주 실태에 관한 기초분석

### 6.2.1 식생활의 실태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하루 몇끼를 식사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하루 세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122명 중에서 92명으로 75.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 (16.4%), “하루 한 끼” 밖에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 (4.9%), “한끼도 못먹을 때가 많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3)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186.

표 6.1: 설문내용의 구성 개요

범주	설문내용
식의주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식사 횟수</li> <li>● 주식의 구성 (입쌀: 강냉이)</li> <li>● 고기의 섭취 횟수</li> <li>● 의류 구매 횟수</li> <li>● 의류 원산지</li> <li>● 의류 주요 구매처</li> <li>● 살림집 형태</li> <li>● 살림집 장만경로</li> <li>●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li> <li>● 시기별 의식주 수준 평가</li> </ul>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사회의 계층 구성</li> <li>● 지역(도/시)의 빈부격차</li> <li>● 직업의 빈부격차</li> <li>● 빈부의 발생 이유</li> <li>● 생활수준의 상대적 평가</li> <li>● 일상생활의 고민거리</li> <li>● 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 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li> <li>● 수입의 주요 지출내역</li> <li>● 총지출에서 너물의 비중</li> </ul>
시장경제화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 활동 중 주요 수입원천</li> <li>● 시장경제 활동의 자재/원료의 원산지</li> <li>● 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li> <li>● 고용노동의 실태</li> <li>● 시기별 장사 단속의 정도</li> <li>● 사유화의 대상</li> </ul>
사회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에 대한 관심 변화</li> <li>● 경쟁의식의 변화</li> <li>●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 변화</li> </ul>
인구사회학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출생연도</li> <li>● 입국연월</li> <li>● 교육수준</li> <li>● 당원여부</li> <li>● 탈북 후 북한지역과의 정보네트워크 실태</li> <li>● 탈북 이전 남한사회 내 인적네트워크 실태</li> <li>● 혼인상태</li> <li>● 탈북연월</li> <li>● 북한에서의 거주지역</li> <li>● 북한에서의 직업</li> <li>● 장사 경험</li> <li>● 자녀의 수</li> </ul>

있다. 하나는 최근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 중에서 생계유지 또는 생존 목적인 경우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2011년 탈북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2011년 북한사회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6.2: 하루 식사 횟수

식사 횟수	빈도	퍼센트
하루 세끼	92	75.4
하루 두끼	20	16.4
하루 한끼	6	4.9
한끼도 못먹음	4	3.3
합계	122	100.0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하루 식사 횟수도 중요하지만 식사의 질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수준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를 할 때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126명 중에서 45명(35.7%)이 “거의 입쌀”로 먹었다고 응답했고,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24.6%), “입쌀과 강냉이를 3:7로 섞어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명(13.5%),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명(26.2%)로 나타났다. 하루 세끼를 먹는 비율은 비교적 높았지만 여전히 쌀밥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명은 강냉이를 섞어 먹어야할 정도로 식사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6.3: 주식의 구성

구성	빈도	퍼센트
거의 입쌀	45	35.7
입쌀과 강냉이 5:5	31	24.6
입쌀과 강냉이 3:7	17	13.5
거의 강냉이	33	26.2
합계	126	100.0

흥미로운 점은 식사횟수 문항과 주식의 구성 문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한끼도 못먹을 때가 많았다”고 응답한 4명은 모두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45명 중에서 42명은 “하루 세끼

를 먹었다”고 응답하여 식사횟수와 주식의 구성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식의 구성성분 못지않게 식생활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칼로리의 급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섭취수준을 각각 총칼로리의 55-77%, 10-15%, 15-3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연숙 외의 연구(2010)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과반수가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기준보다 초과하고,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기준보다 적다.<sup>4)</sup>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북한주민의 단백질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4에 나타나듯, 전체 응답자 125명 중에서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거의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3.2%)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한달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58명(4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명(27.2%),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자가 27명(21.6%)로 뒤를 이었다.

표 6.4: 고기 섭취 횟수

섭취 횟수	빈도	퍼센트
거의 매일 먹음	4	3.2
일주일에 한두번 먹음	27	21.6
한달에 한두번 먹음	58	46.4
일년에 한두번 먹음	34	27.2
먹어본 적 없음	2	1.6
합계	125	100.0

식사횟수와 고기섭취 횟수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하루 세끼를 먹었던 사람들도 고기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두번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명(27.8%)에 불과했다. 하루에 한끼도 먹기 힘들었다고 응답한 사람 4명은 모두 고기를 일년에 한두번 먹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의 구성비율과 고기섭취 횟수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번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46.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반면에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4) 이연숙 외,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 27.

중에서는 고기를 일년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다.

### 6.2.2 의생활의 실태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에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도 배급대상에 포함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급제도가 붕괴된 이후 식량보다 의복은 더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품목이 되었다. 의류의 구매횟수나 의류의 주요 원산지 와 구매처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의생활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화(특히, 계층분화, 유통시장의 구조 등)를 추적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먼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었습니까” 질문에 “일년에 한두번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126명 중 44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절마다 한두번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자가 41명(32.5%), “몇 년에 한두번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자가 30명(23.8%)로 뒤를 이었다. 이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위의 식생활 실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6.5: 의류 구매 횟수

구매 횟수	빈도	퍼센트
계절마다 한두번 구매	41	32.5
일년에 한두번 구매	44	34.9
몇 년에 한두번 구매	30	23.8
남한테 얻어 입음	8	6.3
살 필요가 없었음	3	2.4
합계	126	100.0

그렇다면 계절마다 한두번씩이라도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위에서 살펴본 식생활 수준과 의류 구매횟수와 교차분석해본 결과, 하루 세끼를 먹었던 사람들,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었던 사람들이 계절마다 한두번 정도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차분석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에 한끼 정도 밖에 먹지 못했다는 6명 중 4명이 계절마다 한두번 정도 옷을 사 입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왜 하루 한끼 정도밖에 먹지 못할만큼 가난한 사람이 왜 옷을 자주 사입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심층면접을 통해 어느 정도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일부 북한주민들에게 옷은 일종의 계급 위장의 수단으로 여

겨진다. 다시 말해서, 먹는 수준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옷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입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IPUS가 최근 몇 년간 실시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비율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76.8%가, 2012년 조사에서는 89.8%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문화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에서 미치는 한류의 영향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6에 나타나듯, 주로 입는 옷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114명 중에서 무려 100명(87.7%)에 이른다. 반면에 “남한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2.6%)에 불과했다.

표 6.6: 의류의 원산지

원산지	빈도	퍼센트
북한산	8	7.0
중국산	100	87.7
남한산	3	2.6
일본산	3	2.6
합계	114	100.0

거의 모든 북한주민들은 옷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전체 응답자 123명 중 113명(91.9%)가 시장(또는 장마당)에서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국영상점이나 백화점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 경공업품의 유통이 과거에는 주문제를 기반으로 한 국영상점체제가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제가 지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6.7: 의류의 주요 구매처

구매처	빈도	퍼센트
시장(또는 장마당)	113	91.9
국영상점	1	0.8
백화점	1	0.8
외국에서 직접 구입	8	6.5
합계	123	100.0

### 6.2.3 주거 생활의 실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유형은 연립주택으로 약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단독주택으로 약 33.8%,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주택유형의 비중 순서만을 놓고 비교해보면, IPUS의 북한사회변동조사에서 나타난 살림집 유형의 비중 순서와 유엔에 보고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IPUS의 북한사회변동조사에서 나타난 연립주택의 비중이 더 많게 나타났는데, 북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지역별(도별) 주택유형의 비중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비중은 낮은 편이다.

IPUS의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거주했던 지역의 분포를 보면, 함경북도 거주자가 52%, 양강도 거주자가 3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나타난 이 두 지역의 주택 유형 비중과 IPUS의 조사에서 나타난 주택 유형의 비중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함경북도의 경우 연립주택 58.2%, 단독주택 30.0%, 아파트 16.2%의 분포를 보이고, 양강도의 경우는 연립주택 65.2%, 단독주택 22.8%, 아파트 11.3%의 분포를 나타냈다.<sup>6)</sup>

IPUS의 조사데이터 중 거주지역과 살림집 유형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함경북도의 경우 연립주택 거주자 56.4%, 단독주택 거주자 28.2%, 아파트 거주자 24.6%로 나타났으며, 양강도의 경우는 연립주택 56.4%, 단독주택 28.2%, 아파트 거주자 12.8%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센서스 보고서와 IPUS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IPUS 조사의 함경북도 출신 응답자들 경우는 전체 함경북도 거주 주민들에 비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낮고 아파트 거주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양강도 출신 응답자들 경우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직장과 직위에 따라 주택(1-4호, 특호)을 국가로부터 배정받는다. 북한주민의 주택보급률은 일반적으로 50-60%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보니 1990년 중반 이후 주택 역시 불법적이지만 사고 파는 경제적 교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주택을 어떤 경로로 장만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 역시 북한사회의 변동을 추적하

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2009), p. 230.

6) Ibid. pp. 230-236.

표 6.8: 살림집 유형

유형	빈도	퍼센트
아파트	25	19.8
연립주택(하모니카집)	62	49.2
단독주택(독집)	32	25.4
기타	7	5.6
합계	126	100.0

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존에 국유의 대상이었던 주택이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사 결과, “국가에서 배정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126명 중 36명(28.6%)인 반면에,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응답한 경우는 58명(46.0%)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미 북한사회에 이미 주택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6.9: 살림집 장만 경로

경로	빈도	퍼센트
국가에서 배정받음	36	28.6
내가 돈주고 샀음	58	46.0
내가 직접 지었음	13	10.3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	13.5
친친/주변사람한테 받음	2	1.6
합계	126	100.0

주거 생활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택유형보다는 상수도, 화장실, 난방, 취사 등과 같은 주택의 인프라 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에 보고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는 상수도, 화장실 유형, 난방 및 취사 방식 등과 같은 주거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전반적인 북한사회의 주거 인프라 시설은 낙후된 시설과 전력 부족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집안에 개별 수도가 있는 비중은 85%에 달하나 실제로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하루에 2-3시간 제한적으로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장실의 시설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59.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래식 화장실 형태이다. 물론 평양시의 경우는 76.1%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나, 농촌과 지방도시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져 황해남도의 경우 55.1%

만이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아무리 수세식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전력부족으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세식 화장실의 이용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난방 방식은 석탄(연탄)과 목탄 난방이 각각 47.1%와 45.1%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취사 연료 역시 석탄이 46.1%, 나무땔감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표 6.10: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개조 사항	빈도	퍼센트
집크기나 방의 수를 늘림	42	34.4
인테리어 변경	40	32.8
위생실(화장실) 개조	18	14.8
난방/취사방식 변경	4	3.3
수도시설 개조	10	8.2
생각해본 적 없음	8	6.6
합계	122	100.0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많은 북한주민들은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거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위의 인구센서스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개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결과는 의외로 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겠다는 응답(34.4%)과 인테리어를 변경하겠다는 응답(32.8%)이 가장 많게 나왔다. 반면에 위생실을 개조하거나 난방 및 취사 방식, 수도시설 등을 개조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14.8%, 3.3%, 8.2%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이 주거 인프라 시설의 개선 욕구보다는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더 희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 지표이다. 이러한 욕구는 일종의 문화자본의 획득 욕구로서 ‘과시하기 위한’ 생활양식의 욕구이기도 하다. 프랑스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저명한 저서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에 의하면 이러한 과시적 문화자본의 획득 행위는 중간계급이나 민중계급 출신의 신흥 빈민 부르주아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8)</sup>

7) Ibid. pp. 252-262.

8)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서울: 새물결출판사), pp. 156-157.

실제로 비공식 가구총수입과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월수입이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는 56.2%가, 월수입이 50만원-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62.5%가, 월수입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0%가 집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응답하여 수입이 많을수록 주거 인프라 시설의 개선보다는 집크기나 인테리어 변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 6.2.4 시기별 식의주 수준의 평가

이상에서는 응답자가 탈북직전 시기(2011년)를 기준으로 식의주 실태를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분석결과만으로는 2011년 당시의 식의주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는 있어도 응답자들이 탈북하기 이전 시기에 식의주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조사는 시기별 식의주 수준을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평가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총 여섯 등간으로 구분되며, 평가 방법은 가장 좋았던 시기, 중간정도의 시기, 가장 나빴던 시기를 해당되는 시기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가장 좋았던 시기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127명 중 48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정도의 시기의 경우는 2000년대 후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나빴던 시기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4명(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주민들에게 식의주 생활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인 198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나쁜 시기는 대규모 기근 참사가 발생했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해당되는 1990년대 후반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6.11: 시기별 식의주 수준의 평가 (%)

시기	가장 좋았던 시기	중간 정도의 시기	가장 나빴던 시기
1980년대 후반	41.4	7.7	2.6
1990년대 초반	6.0	21.4	12.8
1990년대 후반	11.2	12.0	46.2
2000년대 초반	9.5	23.9	9.4
2000년대 후반	10.3	25.6	8.5
2010년대 초반	21.6	9.4	20.5
합계	100.0	100.0	100.0

### 6.2.5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만, 평양시의 특수성이 있어 질문지에서는 평양시를 제외하고 지역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평가는 도와 시 단위로 나누어 각각 이루어졌다. 먼저, 도별 생활수준 평가에서는 표 6.12에 나타나듯, 가장 잘 사는 도의 경우는 “평안남도”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함경북도”가 28.6%로 2위, “평안북도”가 12.5%로 3위를 차지했다. 중간 정도 사는 도의 경우는 “양강도”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함경북도”가 21.0%로 2위, “함경남도”가 3위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사는 도의 경우는 “강원도”라는 응답이 4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표 6.12: 도별 생활수준 비교 (%)

생활수준	가장 잘 사는 도	중간 정도 사는 도	가장 못사는 도
평안남도	38.4	10.1	2.6
평안북도	12.5	8.4	0.9
함경남도	7.1	10.9	13
함경북도	28.6	21	10.4
자강도	5.4	7.6	8.7
양강도	7.1	26.1	7
황해북도	0.9	4.2	11.3
황해남도	0	8.4	6.1
강원도	0	3.4	40
합계	100	100	100

시별 생활수준 평가에서는 가장 잘 사는 시의 경우 평양을 제외했을 때 “라선시”라고 응답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의주시”라는 응답이 29.3%로 2위, “평성시”라는 응답이 13.8%로 3위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 사는 시의 경우는 “라선시” 19.7%, “청진시” 18.9%, “신의주시” 15.6% 순서로 나타나 1, 2, 3위의 도시간 응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잘 사는 시와 중간 정도 사는 시의 경우 모두 1위가 “라선시”로 나온 것은 이 도시가 북한에서 경제자유무역지대<sup>9)</sup>로서 외부의 상품 및 자본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잘 사는 도시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 사는 시의 경우는 “사리원시”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이 나타나 공업 또는 상업 지역의

9) 라선시는 1991년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선포된 이후 2010년 1월 특별시로 지정되었다.

표 6.13: 시별 생활수준 비교 (%)

생활수준	가장 잘 사는 시	중간 정도 사는 시	가장 못사는 시
신의주	29.3	15.6	1.8
청진	6	18.9	6.4
라선	37.1	19.7	3.7
혜산	5.2	13.1	13.8
원산	1.7	9	18.3
남포	4.3	3.3	5.5
평성	13.8	14.8	5.5
사리원	0	2.5	30.3
개성	2.6	3.3	14.7
합계	100	100	100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도시가 못사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3 북한주민의 계층별 식의주 실태: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이제까지는 북한주민의 식의주와 관련된 기초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각 문항의 수집된 자료가 도수분포표 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 가지는지 보여주는 빈도분석에 불과하다. 위에서 기술한 식의주 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따라 분포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문항과 식의주 관련 문항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2011년 기준), 북한에서의 거주지역교육수준직업, 그리고 계층이 포함된다. 그리고 식의주 관련 문항에는 하루 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 원산지, 의류 구매처, 살림집 유형, 살림집 장만경로, 그리고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이 포함된다.

교차분석은 명목 또는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두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또는 독립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카이제곱( $\chi^2$ ) 검정을 많이 이용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하게 나왔다는 것은 교차분석한 두 문항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6.14에서 로 표시된 문항들은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 $p$  값) $<0.05$ 로 나타난 것들이다. 즉, 로 표시된 문항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14에서 보이듯 교차분석한 결과, ‘계층’ 변수는 식의주 관련 문항 총 9개중에서 6개 문항(하루 식사횟수, 주식 구성비율,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횟수, 살

표 6.14: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관련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직업	계층
하루 식사 횟수	-	-	-	-	-	*
입쌀과 강냉이 구성	-	-	-	-	-	*
고기 섭취 횟수	-	-	-	-	-	*
의류구매 횟수	-	*	-	-	-	*
의류 원산지	-	-	*	-	-	-
의류 구매처	-	-	*	*	*	-
살림집 유형	-	-	*	-	-	*
살림집 장만 경로	-	-	-	-	-	*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	-	-	-	-	-

\* 표시: 카이제곱 검정 결과의 유의성

림집 유형, 살림집 장만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성별은 어떠한 문항들과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림집 개조희망 사항 문항의 경우는 어떠한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변수의 경우는 의류 구매횟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는 의류 원산지, 의류 구매처, 살림집 유형과의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는 표본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편중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과 직업 변수는 유일하게 의류 구매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3.1 계층별 식의주 실태

우선 배경변수 중에서 가장 많은 문항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계층의식에 따른 식의주 실태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자. 교차분석에서 사용한 계층은 응답자가 탈북직전 시기(2011년)에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관적인 계층의식’ 또는 ‘귀속적 계층’을 의미한다. 탈북 직전 시기에 응답자들이 속했던 계층의 구성은 상층 8.9%, 중간층 50.8%, 하층 40.3%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질문 이외에도 응답자들이 일반 북한사회의 계층 구성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은 상층, 중간층, 하층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구성되는지 직접 구성 비율을 기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상층의 경우 20%라고 기술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간층의 경우는 30%라고 기술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하층의 경우는 50%라고 기술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 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사회의 계층은 상층 20%, 중간층 30%, 하층이 50%로 이루어진 것으로 응답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직전을 기준으로 응답자 자신이 속한 계층과 북한 사회의 일반 계층 구성 비율을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은 일반 북한주민들보다 중간계층에 속한 비율이 2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최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사회에서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루 식사횟수와 계층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식생활에서 계층적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6.15에 나타나듯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 10명 중 9명(90%)은 하루 세끼를 먹었다. 또 중간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전체 63명 중 56명(88.9%)이 하루 세끼를 먹었다. 하지만 하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전체 47명 중 26명(55.3%)만이 하루 세끼를 먹었다고 응답했다.

표 6.15: 계층과 하루 식사횟수의 교차분석 (단위: 명(%))

	하루 세끼	하루 두끼	하루 한끼	한끼도 못먹음	합계
상층	9(90.0)	0(0.0)	1(10.0)	0(0.0)	10(100.0)
중간층	56(88.9)	5(7.9)	1(1.6)	1(1.6)	63(100.0)
하층	26(55.3)	14(29.8)	4(8.5)	3(6.4)	47(100.0)
합계	91(75.8)	19(15.8)	6(5.0)	4(3.3)	120(100.0)

주식의 구성을 보면 계층간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표 6.16에서 보이듯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11명 중 9명(81.8%)이 거의 입쌀로 먹었다고 응답했지만, 중간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63명 중 26명(41.3%)이 거의 입쌀로 먹었다고 응답했다. 하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49명 중 10명(20.4%)만이 거의 입쌀로 먹었다고 응답했다. 위에서 본 식사 횟수 경우 상층과 중간층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데 비해, 주식의 구성에서는 상층과 중간층 간의 격차가 두배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사 횟수보다는 주식의 구성과 같은 식사의 질적인 차원이 계층간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기 섭취횟수는 식생활의 계층간 격차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6.17에 나타나듯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 11명 중 10명(90.0%)은 고기를 거의 매일 먹었거나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간층에 속하는 응답자 62명 중 19명(30.6%)만이 고기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을 수 있었다. 고기 섭취횟수에서 상층과 중간층의 격차는 3배 가까이로 주

표 6.16: 계층과 주식 구성비율의 교차분석 (단위: 명(%))

구성비율	거의 입쌀	입쌀과 강냉이 5:5	입쌀과 강냉이 3:7	거의 강냉이	합계
상층	9(81.8)	1(9.1)	0(0.0)	1(9.1)	11(100.0)
중간층	26(41.3)	21(33.3)	9(14.3)	7(11.1)	63(100.0)
하층	10(20.4)	8(16.3)	7(14.3)	24(49.0)	49(100.0)
합계	45(36.6)	30(24.4)	16(13.0)	32(26.0)	123(100.0)

식의 구성에 비해 더 큰 격차를 보였다. 하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49명 중 2명(4.1%)만이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먹을 수 있다고 응답했고, 2명 중 1명만이 겨우 일년에 한두번 정도 고기를 먹었다고 응답했다.

표 6.17: 계층과 고기 섭취횟수의 교차분석 (단위: 명(%))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먹어본적 없음	합계
상층	1(9.1)	9(81.8)	0(0.0)	1(9.1)	0(0.0)	11(100.0)
중간층	3(4.8)	16(25.8)	35(56.5)	8(12.9)	0(0.0)	62(100.0)
하층	0(0.0)	2(4.1)	20(40.8)	25(51.0)	2(4.1)	49(100.0)
합계	4(3.3)	27(22.1)	55(45.1)	34(27.9)	2(1.6)	122(1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북한주민의 계층간 식생활 수준을 결정짓는데 영향력의 크기로 변수를 나열하면 고기의 섭취 횟수 > 주식의 구성 > 하루 식사의 횟수 순서라고 할 수 있겠다.

의생활 역시 계층간의 격차를 잘 보여주는 영역이지만 식생활에 비해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생활의 경우 중간층과 하층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8에서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를 보면, 상층의 응답자 경우 11명 중 10명(90.9%)은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간층은 63명 중 24명(38.1%)만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하층의 경우는 49명 중 6명(12.2%)만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거주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격차는 식생활이나 의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으며, 복합적 분포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농촌지역일수록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아진다. 북한의 경우 직업과 직위에 따라 배정받는 집의 크기나 주택유형이 달라지는데,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의 경우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를, 말단 노동자나 사무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연립주택을 협동농장원은 방 2개

표 6.18: 계층과 의류 구매횟수의 교차분석 (단위: 명(%))

	계절마다 한두 벌	일년에 두 벌	한 몇 년에 두 벌	한 몇 년에 한 번 남한테서 얻어입음	구매할 필요없음	합계
상층	10(90.9)	0(0.0)	1(9.1)	0(0.0)	0(0.0)	11(100.0)
중간층	24(38.1)	25(39.7)	10(15.9)	1(1.6)	3(4.8)	63(100.0)
하층	6(12.2)	18(36.7)	18(36.7)	7(14.3)	0(0.0)	49(100.0)
합계	40(32.5)	43(35.0)	29(23.6)	8(6.5)	3(2.4)	123(100.0)

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문화주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 급에 속하는 주민의 경우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고,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배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 이상 급의 간부들은 독립식 다층주택의 고급주택을 배정받는다.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 유형의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계층적 특성이나 생활수준을 평가하기 힘들다.

실제로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북한에서 거주했던 살림집의 유형이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순서로 많이 나타났으며, 중간층의 응답자 경우는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의 순서로, 그리고 하층의 응답자 경우는 연립주택 > 아파트 > 단독주택 순서로 비중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계층간의 격차를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는 살림집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는 계층간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활수준이 높은 층에 속하는 응답자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수준이 낮은 층에 속할수록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계층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9: 계층과 살림집 유형의 교차분석 (단위: 명(%))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기타	합계
상층	3(27.3)	2(18.2)	6(54.5)	0(0.0)	11(100.0)
중간층	11(17.5)	29(46.0)	19(30.2)	4(6.3)	63(100.0)
하층	10(20.0)	31(62.0)	6(12.0)	3(6.0)	50(100.0)
합계	24(19.4)	62(50.0)	31(25.0)	7(5.6)	124(100.0)

경제난의 장기화와 국가의 사회통제의 이완은 국유의 대상이었던 주택마저 사

고팔 수 있는 시장에서의 교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미 북한사회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주택시장이 형성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살림집을 어떤 경로를 통해 장만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주택시장의 규모와 주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6.20에서 보이듯 계층이 낮을수록 국가에서 배정 받은 살림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 자기가 경비를 들여 살림집을 짓는 경우는 계층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층은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에 대한 불만족이 크기 때문에 대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살림집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계층별로 비공식적인 가구 총월수입을 파악해보면 상층의 응답자는 9명 중에 7명이 가구 월총수입이 30만원 이상이었고, 심지어 그중 4명은 월총수입이 1백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경제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층의 경우는 직접 자기집을 짓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층의 응답자 경우는 41명중 29명(70.7%)이 가구 월총수입이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하층의 경우는 경제력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표 6.20: 계층과 살림집 장만경로 (단위: 명(%))

	국가 배정	돈주고 샀음	직접 지음	조상/부모로부터 상속	친척/주변사람한테서 받음	합계
상층	2(18.2)	3(27.3)	3(27.3)	3(27.3)	0(0.0)	11(100.0)
중간층	14(22.6)	29(46.8)	9(14.5)	8(12.9)	2(3.2)	62(100.0)
하층	20(40.0)	24(48.0)	1(2.0)	5(10.0)	0(0.0)	50(100.0)
합계	36(29.3)	56(45.5)	13(10.6)	16(13.0)	2(1.6)	123(100.0)

### 6.3.2 기타 배경변수와 식의주 생활 실태

연령 변수는 식의주 관련 문항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류 구매횟수와 의 교차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젊은 층일수록 의류의 구매횟수가 많아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구매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주민들 역시 일반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21에 나타나듯 10대의 경우는 5명 중 4명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사입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40대-60대의 경우는 몇

년에 한두 벌의 옷을 사입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대의 경우도 10명 중 3-4명은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사입었거나 10명 중 5명이 일년에 한두 벌의 옷을 사입었다고 응답해 비교적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21: 연령과 의류 구매횟수의 교차분석

	계절마다 한두벌	일년에 한두벌	몇 년에 한 두벌	남한테서 얻어입음	구매할 필요없음	합계
10대	4(80.0)	1(20.0)	0(0.0)	0(0.0)	0(0.0)	5(100.0)
20대	17(37.0)	23(50.0)	3(6.5)	1(2.2)	2(4.3)	46(100.0)
30대	10(41.7)	5(20.8)	6(25.0)	3(12.5)	0(0.0)	24(100.0)
40대	7(25.0)	9(32.1)	9(32.1)	2(7.1)	1(3.6)	28(100.0)
50대	2(16.7)	3(25.0)	7(58.3)	0(0.0)	0(0.0)	12(100.0)
60대	0(0.0)	3(30.0)	5(50.0)	2(20.0)	0(0.0)	10(100.0)
합계	40(32.0)	44(35.2)	30(24.0)	8(6.4)	3(2.4)	125(100.0)

## 6.4 결론

올해로 처음 실시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연구방법론상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표본의 지역적 구성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7%로 지역 쏠림현상이 크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지역의 필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조사방식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탈북자 모집단의 지역적 편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늘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가 과거와 같이 생계유지 또는 생존 목적인 경우가 압도적이지 않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와 같이 탈북동기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생활수준도 비교적 나쁘지 않아 응답자의 계층적 경험이 일반주민과 달라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표본의 지역적, 계층적 편중 현상을 최대한 상쇄시키려는 조사의 방법론적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개인적 인식 또는 경험을 측정하는 것과 북한주민의 일반적 인식 또는 경험을 측정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이 이미 북한을 나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과 조사에 응답하는 시점간의 시간적 단절로 인해 그 사이에 기억의 변형 또는 인식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표의 표현뿐만 아니라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 참여자들에게 기억의 시점과 공간을 가능한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로 되돌리기 위해 수차례 강조하였다.

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북한주민의 식생활에서는 양적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식사횟수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나 주식의 구성성분이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 등과 같은 식생활의 질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각하고, 특히 계층간 격차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 하루 식사횟수나 주식 구성,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간층과 하층으로 내려가면 주식에서 강냉이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간 식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데는 고기섭취횟수 > 주식의 구성 > 하루 식사횟수 순서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생활 실태에서는 먹는 문제에 비해 입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간 격차(특히 중간층과 하층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연령층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의복에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생활에서는 살림집 유형보다는 살림집을 장만하는 경로가 더 뚜렷한 패턴을 보였는데,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층일수록 국가에서 배정해준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미 북한에 집을 개인들간에 사고파는 주택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화장실, 난방, 취사방식과 같이 주거의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 결과 방의 수나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웠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주거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불만이 없다기보다는 이미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적응력이 생겼으며, 오히려 소득수준이 오르면서 북한주민에게도 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문화양식의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보여준 것은 북한사회의 식의주 생활에 대한 기초실태를 간략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식의주 생활의 변화가 전체 북한사회의 변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또 종단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요인들이 식의주 생활에서 계층적 분화를 촉발시키고 있는지 좀더 면밀한 심층분석이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이러한 변화가 어떤 패턴을 보

이고 있는지는 이후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추적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이 연구가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 제 7 장

# 북한사회의 빈부격차 실태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 7.1 시작하는 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체제전환 과정에서 빠르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던 임금의 비중이 줄고 대신 개인들 간에 격차가 큰 사적·비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결과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초기 소득불균등이 빠르게 심화된 러시아연방 등 슬라브권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균등한 소득분배를 보인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을 비교하면 이는 분명하게 확인된다.<sup>1)</sup>

북한의 경우 체제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급격한 정치, 사회경제적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계획경제 고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념이나 선전과 달리 경제적 토대는 과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 대안의 사업체계 등에 기반한 계획경제의 원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기저에는 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급격한 증가가 존재한다.<sup>2)</sup>

1)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1호 (2008), pp. 203-206.

2)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참조.

북한에서 시장을 활용한 경제활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국가의 공식적인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실적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반면, 시장을 활용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공식비공식적인 소득은 경제주체들의 소득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에서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출신성분에 기초한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와 달리 경제적 계층분화가 발생하고 시장에 연계된 새로운 계층질서-불평등체계가 형성된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균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신뢰할만한 북한주민 소득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살펴 본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sup>3)</sup> 이 연구들은 북한이나 국제기구의 문헌과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나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북한 사회의 소득분화와 새로운 계층질서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주민 소득에 대한 자료 접근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된 북한주민 사회변동 조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소득수준, 소비지출, 소득원, 시장에 대한 통제나 뇌물 공여 등 사적 경제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여 소득분화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경쟁의식, 이동에 대한 통제완화 등 사회의 개방성도 알아보았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심층면접 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 기초조사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3) 김병로·김성철,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1998);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정영철 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양문수, “북한 사람은 월급 3천원(1달러)으로 사는가?” 평화재단 10월 포럼 발표문 (2006년);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정은미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등.

## 7.2 북한주민들의 빈부격차 요인과 구조

### 7.2.1 조사대상 주민들의 생활수준

조사대상 주민들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의 총합은 3천원 미만이 60%를 차지하였다.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가구생활비의 크기는 교육이나 당원여부, 직종보다 주로 가족 구성원 중 직장에 다니는 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북한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가구생활비 총합 (월평균)

구 분	빈도(명)	응답 비율(%)
1천원 미만	44	40.0
1천원 이상-3천원 미만	23	20.9
3천원 이상-5천원 미만	16	14.5
5천원 이상-1천원 미만	8	7.3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9	8.2
5만원 이상	10	9.1

반면 가족구성원들이 장사나 다른 부업(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은 하층의 경우 1만원 미만이 32.4%지만 10만원 미만이 47.6%를 차지하였고, 중층으로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이 30.5%였으며 상층으로 30만원 이상이 22%를 차지하였다.<sup>4)</sup> 그리고 10만원 이상이 52.5%로 절반을 넘는다. 1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 중에는 월평균 1백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도 4.8%를 차지하였다.

표 7.2: 북한에서 장사/부업으로 벌어들인 가구총수입 (월평균)

구 분	빈도(명)	응답 비율(%)	비고(%)	
하	1만원 미만	34	32.4	47.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6	15.2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2	30.5	30.5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9	8.6	
상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9	8.6	22
	1백만원 이상	5	4.8	

4) 조사대상 주민들의 탈북직전 생활수준과 장사나 부업을 통해 확보한 월평균 소득을 교차분석할 경우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70.8%의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점과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40.4%의 소득이 10만원이상-30만원미만인 점,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77.7%의 소득이 3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상중하층을 구분하였다.

조사대상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하여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주요한 직업 범주인 노동자와 농민이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면 노동자들의 경우 10만원미만이 37.8%, 10만원이상-30만원미만이 43.2%를 차지하고 30만원 이상도 18.9%를 보인 반면 농민들은 70%가 1만원미만이었으며 30만원 이상은 10%로 나타났다. 사무원의 경우 30만원이상-50만원미만이 40%를 차지하였으며 50만원이상도 40%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 10만원이상-30만원미만이 28.6%였으나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장사나 부업에 의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상층의 비중은 사무원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동자, 전문가, 가정부인, 장사, 농민의 순으로 나타났다(군인과 외화벌이일군은 빈도가 낮아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직업을 가정부인이나 장사로 응답한 경우 대부분이 소매장사였다.

조사대상 주민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생활수준 평가와 달리 국가지급 소득과 장사나 부업을 통해 확보한 소득을 교차 비교하여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7.4에서 보듯 국가소득이 1천원미만인 반면 장사나 부업을 통한 사적 소득도 1만원미만인 경우가 유효한 응답자 96명 중 15명으로 15.6%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경우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활동에도 적응하지 못하면서 하루 세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 사회의 극빈층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대상 북한 주민들의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총소득에 대해 당원 여부나 장사경험 유무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월소득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원에서는 40%를 차지한 반면 비당원인 경우 19.3%였다. 다음에서 검토할 시기별 생활수준과 관련 탈북직전 생활수준과 당원 여부와의 뚜렷한 연관성은 찾기 어려웠으나 당원의 경우 상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16.7%를 차지한 반면 비당원의 경우 상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7.7%였다. 이는 당원으로서의 정치적 위상과 그에 따른 권력관계가 경제적 소득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사경험이 있는 경우 1만원 미만이 25.3%인 반면 장사경험이 없는 경우는 1만원 미만이 53.6%로 절반을 넘었다.

장사나 부업을 통한 가구 총소득은 공식적인 직업, 주된 수입원과는 유의할만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주된 수입원과 관련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이 1백만원 이상의 경우 소매장사, 되거리장사, 외화벌이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도 수준이 높다고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표 7.3: 직업별 가구총수입 (장사/부업, 월평균)

구 분		가구총수입					
		1만원 미만	1만원이상-10만원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만원이상-1백만원미만	1백만원 이상
노동자	빈도 (명)	9	5	16	2	2	3
	비중 (%)	24.3	13.5	43.2	5.4	5.4	8.1
	상증하 (%)	37.8		43.2		18.9	
농민	빈도 (명)	7	0	2	1	0	0
	비중 (%)	70	0	20	10	0	0
	상증하 (%)	70		20		10	
사무원	빈도 (명)	1	0	0	2	1	1
	비중 (%)	20	0	0	40	20	20
	상증하 (%)	20		0		80	
전문가	빈도 (명)	2	1	2	1	1	0
	비중 (%)	28.6	14.3	28.6	14.3	14.3	0
	상증하 (%)	42.9		28.6		28.6	
군인	빈도 (명)	1	1	0	0	1	0
	비중 (%)	33.3	33.3	0	0	33.3	0
	상증하 (%)	66.6				33.3	
외화벌이일군	빈도 (명)	1	0	0	0	2	0
	비중 (%)	33.3	0	0	0	66.7	0
	상증하 (%)	33.3				66.7	
장사	빈도 (명)	3	3	4	0	1	0
	비중 (%)	27.3	27.3	36.4	0	9.10%	0
	상증하 (%)	54.6		36.4		9.1	
가정부인	빈도 (명)	5	3	4	2	1	0
	비중 (%)	33.3	20	26.7	13.3	6.70%	0
	상증하 (%)	53.3		26.7		20	

월평균 가구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36.4%로 전문학교나 고등중학교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학교 이상이 45.5%, 전문학교가 38.9%, 고등중학교가 47.9%를 차지하였고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학교 이상이 18.2%, 고등중학교가 19.6%인 반면 전문학교는 33.4%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직전을 기준으로 자신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주민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44.4%를 차지하였고 50만원 이상으로 보면 55.5%였다.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40.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만원 미만이 41.5%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10만원 미만이 70.8%였다.

표 7.4: 국가지급 소득별 장사/부업 소득 비교(월평균)

구 분		가구총수입						
		1만원 미만	1만원이상-10만원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만원이상-1백만원미만	1백만원 이상	
가 구 별	1천원 미만	빈도(명)	15	5	11	4	2	2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38.50%	12.80%	28.20%	10.30%	5.10%	5.10%
국 가	1천원이상 3천원미만	빈도(명)	7	1	7	0	4	1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35.00%	5.00%	35.00%	0.00%	20.00%	5.00%
지 급	3천원이상 5천원미만	빈도(명)	2	4	4	2	1	1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14.30%	28.60%	28.60%	14.30%	7.10%	7.10%
소 득	5천원이상 1만원미만	빈도(명)	2	0	1	2	1	1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28.60%	0.00%	14.30%	28.60%	14.30%	14.30%
	1만원이상 5만원미만	빈도(명)	3	2	1	0	0	0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50.00%	33.30%	16.70%	0.00%	0.00%	0.00%
	5만원이상	빈도(명)	4	1	3	1	1	0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40.00%	10.00%	30.00%	10.00%	10.00%	0.00%
전 체	빈도(명)	33	13	27	9	9	5	
	국가지급 중 장사/부업 중		34.40%	13.50%	28.10%	9.40%	9.40%	5.20%

표 7.5: 당원 여부에 따른 가구총수입(장사/부업, 월평균)

구 분		가구총월수입(장사/부업)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당원	빈도(명)	4	3	2	0	4	2
	비중(%)	26.7	20	13.3	0	26.7	13.3
비당원	빈도(명)	30	12	29	9	5	3
	비중(%)	34.1	13.6	33	10.2	5.7	3.4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25

표 7.6: 장사경험에 따른 가구총수입(장사/부업, 월평균)

구 분		가구총월수입(장사/부업)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있음	빈도(명)	19	14	26	6	5	5
	비중(%)	25.3	18.7	34.7	8	6.7	6.7
없음	빈도(명)	15	1	5	3	4	0
	비중(%)	53.6	3.6	17.9	10.7	14.3	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20

표 7.7: 학력수준별 가구총수입(월평균)

구 분	가구총월수입(장사/부업)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대학교	빈도(명)	4	1	4	1	1	0
이상	비중(%)	36.40%	9.10%	36.40%	9.10%	9.10%	0.00%
전문	빈도(명)	5	2	5	3	3	0
학교	비중(%)	27.80%	11.10%	27.80%	16.70%	16.70%	0.00%
고등중	빈도(명)	22	12	23	5	5	4
학교	비중(%)	31.00%	16.90%	32.40%	7.00%	7.00%	5.60%
인민	빈도(명)	2	1	0	0	0	0
학교	비중(%)	66.70%	33.30%	0.00%	0.00%	0.00%	0.00%
무학	빈도(명)	0	0	0	0	0	1
	비중(%)	0.00%	0.00%	0.00%	0.00%	0.00%	10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92

표 7.8: 장사나 부업을 통한 생활수준별 가구총수입(월평균)

구 분	가구총월수입(장사/부업)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생활수준	상층	0	11.1	11.1	22.2	11.1	44.4
(탈북직전)	중층	26.9	5.8	40.4	11.5	13.5	1.9
	하층	41.5	29.3	24.4	2.4	2.4	0

5)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00

조사대상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평가한 시기별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90년대 중후반에는 상층이 13.3%, 중층과 하층이 각각 40.8%와 45.8%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각각 5.7%와 39.8%로 조금 감소한 반면 중층은 54.5%로 약간 증가하였다. 탈북직전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층이 8.9%로 약간 늘어났고 중층이 50.8%로 약간 줄어들었다.

표 7.9: 북한에서의 시기별 생활수준(%)

구 분	(가) 1994년-1999년	(나) 2000년-2004년	(다) 탈북 직전
① 상층	13.3	5.7	8.9
② 중층	40.8	54.5	50.8
③ 하층	45.8	39.8	40.3

한편 시기별로 상·중·하 계층 간 이동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 상층에 속

하였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 40.0%와 53.3%가 2000년대 전반에 각각 중층과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7%에 불과하였다. 90년대 중후반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던 주민들 중 2000년대 전반에 73.5%가 중층으로 남았고 10.2%와 16.3%가 각각 상층과 하층으로 이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90년대 후반에 하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 2000년대 전반에 60.0%는 하층으로 남았고 38.2%는 중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00년대 전반에 상층이라고 응답한 주민들 중 탈북직전에 14.3%만 상층에 속하였고 57.1%와 28.6%는 각각 중층과 하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00년대 전반에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 탈북직전에 56.1%가 중층에 속하였고 10.6%와 33.3%는 각각 상층과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2000년대 전반에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 탈북직전에 53.1%가 하층에 속한 반면 4.1%와 42.9%가 각각 상층과 중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하였다.

90년대 전반에 상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 탈북직전에 62.5%와 37.5%가 각각 중층과 하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하여 상층에 남아있는 경우가 없었다. 중층에 속하였던 주민들 중 55.1%는 여전히 중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10.2%와 34.7%는 각각 상층과 하층으로 이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층의 경우가 시기에 45.5%가 하층으로 남았고 9.1%와 45.5%는 각각 상층과 중층으로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주민들이 북한에서 소득을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은 1순위가 식의주 문제 해결이었다. 장사 또는 사업 밀천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3순위로 뇌물과 자녀교육이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이 여전히 생계문제를 중심으로 소비되거나 사적 경제활동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면서 자산축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가계지출을 보면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대부분 식의주 해결을 위한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의 경우 식의주에 대한 지출이 44.4%이고 장사나 사업밀천 마련을 위한 지출이 33.3%를 차지하였고, 1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의 경우 장사나 사업밀천 마련을 위한 지출이 80%를 차지한다. 이들은 다른 계층과 달리 향후 사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산축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조사대상 주민들의 우선적인 지출부문은 가구구성원 수, 연령층, 직업, 당원 여부, 장사경험 유무, 주된 수입원 등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경우 식의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표 7.10: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 (복수 응답)

순 위	지출 부문	응답 비율(%)
1순위	식민주 문제 해결	75.2
	자녀 교육	5.0
	장사 또는 사업 밀천	13.2
	뇌물/미래 위해 그냥 모아 둠	각각 2.5
2순위	식민주 문제 해결	14.2
	자녀 교육	19.5
	장사 또는 사업 밀천	44.2
	뇌물	9.7
3순위	자녀 교육	21.8
	장사 또는 사업 밀천	12.7
	뇌물	21.8
	사치품 소비	10.0
	미래 위해 그냥 모아 둠	17.3

표 7.11: 소득수준(장사/부업)에 따른 가계지출

구 분		수입중 가장 많은 지출부분(1순위)							전체
		식민주 문제	자녀 교육	장사 또는 사업 밀천	뇌물	사치품 소비	그냥 모아둠	기타	
1만원미만	빈도(명)	26	1	1	1	0	1	0	30
	비중(%)	86.7	3.3	3.3	3.3	0	3.3	0	100
1만원이상 10만원미만	빈도(명)	12	1	3	0	0	0	0	16
	비중(%)	75	6.2	18.8	0	0	0	0	100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빈도(명)	24	1	3	2	0	0	1	31
	비중(%)	77.4	3.2	9.7	6.5	0	0	3.2	100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빈도(명)	4	2	3	0	0	0	0	9
	비중(%)	44.4	22.2	33.3	0	0	0	0	100
50만원이상 1백만원미만	빈도(명)	6	1	1	0	1	0	0	9
	비중(%)	66.7	11.1	11.1	0	11.1	0	0	100
1백만원이상	빈도(명)	1	0	4	0	0	0	0	5
	비중(%)	20	0	80	0	0	0	0	1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31

64.3%로 70-80%에 이르는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반면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21.4%로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2: 교육수준별 가계지출

구분	수입 중 가장 많은 지출부문(1순위)							전체	
	식의주 문제	자녀 교육	장사 또는 사업 밀친	뇌물	사치품 소비	그냥 모아둠	기타		
대학교 이상	빈도(명) 비중(%)	9 64.30%	3 21.40%	1 7.10%	1 7.10%	0 0.00%	0 0.00%	0 0.00%	14 100.00%
전문 학교	빈도(명) 비중(%)	18 81.80%	0 0.00%	3 13.60%	0 0.00%	1 4.50%	0 0.00%	0 0.00%	22 100.00%
고등중 학교	빈도(명) 비중(%)	61 77.20%	3 3.80%	11 13.90%	1 1.30%	0 0.00%	2 2.50%	1 1.30%	79 100.00%
인민 학교	빈도(명) 비중(%)	3 75.00%	0 0.00%	0 0.00%	0 0.00%	0 0.00%	1 25.00%	0 0.00%	4 100.00%
무학	빈도(명) 비중(%)	0 0.00%	0 0.00%	1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86

조사대상 주민들이 전체 수입에서 뇌물로 지출한 비중은 10% 이하가 24.6%로 나타났고 반면 수입의 10% 초과분을 뇌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61.5%였으며 수입의 50% 이상을 뇌물로 지출했다는 응답도 11.5%를 차지하였다. 뇌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의 86.1%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북한에서 전체 수입 중 뇌물로 고인 액수 비중

뇌물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답 비율(%)
전혀 없음	13.9
10% 이하	24.6
20% 이하	16.4
30% 이하	18.9
40% 이하	9.8
50% 이하	4.9
50% 이상	11.5

뇌물의 제공은 장사경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장사경험이 없는 경우 뇌물을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31.4%를 차지하였고 10% 이하로 제공한 경우도 25.7%를 차지하였다. 반면 장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0%에 불과하였고 10% 이하로 제공한 경우는 23.8%였으며, 수입의 10% 초과분을 뇌물로 제공한 경우를 모두 합하면 70.3%를 차지하였다.

표 7.14: 장사경험 유무와 수입 중 뇌물 비중

구 분	일상의 고민거리						
	전혀 없음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50% 이상
3-10							
장사경험 있다	빈도(명)	5	20	15	17	10	4
	비중(%)	6.00%	23.80%	17.90%	20.20%	11.90%	4.80%
장사경험 없다	빈도(명)	11	9	5	6	2	1
	비중(%)	31.40%	25.70%	14.30%	17.10%	5.70%	2.90%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문제는 돈 버는 문제였다. 응답자의 56.7%가 돈 버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였고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각종 단속에 대한 우려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7.15: 북한의 일상에서 가장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

걱정과 고민거리	응답 비율 (%)
돈 벌어야 하는 걱정	56.7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0.8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	22
조직생활	6.3
출세	2.4
자녀 교육	4.7
기타	2.4

북한주민들의 걱정이나 고민거리는 당원 여부나 주된 수입원과는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장사경험이나 직업, 교육과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경험이 있는 경우 돈을 벌어야 하는 걱정이 62.1%였으며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단속에 대한 걱정이 26.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장사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걱정이 45.9%를 차지하였으나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단속대신 조직생활 문제가 21.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노동자나 전문가, 외화벌이일군, 가정주부는 돈 버는 문제에 이어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단속을 가장 많이 걱정한 반면 농민이나 군인의 경우 돈 버는 문제와 함께 조직생활을, 사무원의 경우 돈 버는 문제 다음으로 자녀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대학교 이상에서는 돈 버는 문제, 각종 단속, 자녀교육 문제

표 7.16: 장사경험 유무와 일상의 고민거리

		일상의 고민거리						
		돈벌어야 하는 걱정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보안원/ 보위부의 각종 단속	조직 생활	출세 출세	자녀 교육	기타
장사경험 있다	빈도 (명)	54	1	23	0	1	2	3
	비중 (%)	62.10%	1.10%	26.40%	0.00%	1.10%	2.30%	3.40%
장사경험 없다	빈도 (명)	17	0	3	8	2	4	0
	비중 (%)	45.90%	0.00%	8.10%	21.60%	5.40%	10.80%	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00

표 7.17: 직업별 일상의 고민거리

		일상의 고민거리						
		돈벌어야 하는 걱정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보안원/ 보위부의 각종 단속	조직 생활	출세 출세	자녀 교육	기타
노동자	빈도 (명)	22	0	15	0	1	1	0
	비중 (%)	51.20%	0.00%	34.90%	0.00%	2.30%	2.30%	0.00%
농민	빈도 (명)	3	0	2	3	0	1	1
	비중 (%)	27.30%	0.00%	18.20%	27.30%	0.00%	9.10%	9.10%
사무원	빈도 (명)	3	0	1	0	1	2	0
	비중 (%)	42.90%	0.00%	14.30%	0.00%	14.30%	28.60%	0.00%
전문가	빈도 (명)	5	0	2	0	0	1	1
	비중 (%)	55.60%	0.00%	22.20%	0.00%	0.00%	11.10%	11.10%
학생	빈도 (명)	5	0	1	2	0	0	0
	비중 (%)	62.50%	0.00%	12.50%	25.00%	0.00%	0.00%	0.00%
군인	빈도 (명)	2	0	1	2	0	0	0
	비중 (%)	40.00%	0.00%	20.00%	40.00%	0.00%	0.00%	0.00%
외화벌이 일군	빈도 (명)	2	0	1	0	0	0	0
	비중 (%)	66.70%	0.00%	33.30%	0.00%	0.00%	0.00%	0.00%
장사	빈도 (명)	11	0	1	0	0	1	0
	비중 (%)	84.60%	0.00%	7.70%	0.00%	0.00%	7.70%	0.00%
가정부인	빈도 (명)	12	0	4	0	0	0	0
	비중 (%)	75.00%	0.00%	25.00%	0.00%	0.00%	0.00%	0.00%
무직/기타	빈도 (명)	6	1	0	1	1	0	0
	비중 (%)	66.70%	11.10%	0.00%	11.10%	11.10%	0.00%	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16

와 함께 조직생활 문제까지 고르게 나타난 반면, 전문학교나 고등중학교 수준에서는 돈 버는 문제에 이어 각종 단속에 대한 우려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7.18: 교육수준과 일상의 고민거리

		일상의 고민거리						
		돈벌어야 하는 걱정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보안원/ 보위부의 각종 단속	조직 생활	출세 출세	자녀 교육	기타
대학교 이상	빈도(명) 비중(%)	3 21.40%	0 0.00%	3 21.40%	2 14.30%	1 7.10%	3 21.40%	2 14.30%
전문 학교	빈도(명) 비중(%)	18 78.30%	0 0.00%	3 13.00%	0 0.00%	1 4.30%	0 0.00%	0 0.00%
고등중 학교	빈도(명) 비중(%)	47 56.60%	0 0.00%	22 26.50%	5 6.00%	1 1.20%	2 2.40%	1 1.20%
인민 학교	빈도(명) 비중(%)	2 50.00%	0 0.00%	0 0.00%	1 25.00%	0 0.00%	1 25.00%	0 0.00%
무학	빈도(명) 비중(%)	1 50.00%	1 5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00

이러한 조사결과는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장사를 한 경험이 다르다는 점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나 전문가, 외화별이일군의 경우 70% 전후가 장사경험을 보유하고 가정부인의 경우는 모두 장사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농민이나 사무원, 군인의 경우 40-50% 정도만 장사경험을 갖고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도 대학교 이상의 경우 38.5%만 장사경험을 갖고 있는데 비해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경우 70% 이상이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장사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적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비합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돈 버는 문제에 더해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각종 단속에 대한 우려 또한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2.2 북한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들은 직업과 생활수준의 관계에서 중앙당 간부나 법기관 간부들이 가장 잘 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7.21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잘 사는 직업으로 1순위는 중앙당 간부, 2순위는 법기관 간부를 들고 있다. 중간정도 사는 직업으로는

표 7.19: 직업별 장사경험 유무

구 분	장사 경험				
	빈도(명)	빈도(명)	있다(%)	빈도(명)	없다(%)
직업					
노동자	43	31	72.1	12	27.9
농민	11	6	54.5	5	45.5
사무원	7	3	42.9	4	57.1
전문가	9	7	77.8	2	22.2
학생	8	4	50	4	50
군인	5	2	40	3	60
외화별이일군	3	2	66.7	1	33.3
장사	13	13	100	0	0
가정부인	13	12	92.3	1	7.7
무직(기타)	9	4	44.4	5	55.6
전 체	121	84	69.4	37	30.6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25

표 7.20: 교육수준별 장사경험 유무

구 분	장사 경험		
	빈도(명)	있다	없다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13	38.5	61.5
전문학교	22	72.7	27.3
고등중학교	82	75.6	24.4
인민학교	4	25	75
무학	2	100	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16

외화별이 종사자와 시장상인을 꼽고 있으며 가장 못사는 직업은 노동자와 농민을 지적하고 있다. 외화별이 종사자들은 지방당 간부나 인민위원회 간부들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치적 계층질서에 따른 권력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표 7.22을 보면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첫째 이유로 지적된 것은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이다. 그리고 2순위로 지적된 것이 권력층과의 안면관계이다. 이는 모두 정치적 위계질서 또는 그와 관련된 인식을 보여준다. 3순위로 지적된 출신성분의 차이도 정치적 계층질서의 토대가 되는 요소이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북한에서의 직업이나 주된 수입원, 당원여부, 교육수준 등과 무관하게 나타난다.

표 7.21: 북한에서의 직업과 생활수준(복수 응답)

구 분	순 위	직 업	응답 비율(%)
가장 잘 사는 직업	1순위	중앙당 간부	77.1
		법기관 간부	13.6
		외화별이	5.1
	2순위	법기관 간부	59.3
		외화별이	15.7
		지방당 간부	13.9
중간 정도 사는 직업	1순위	외화별이	28.7
		법기관 간부	18.9
		지방당 간부	18.9
	2순위	시장상인(장사)	19.4
		인민위원회 간부	16.7
		지방당 간부	15.7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	농장원	51.2
		기업소공장 노동자	32.5
		군관	5.7
	2순위	농장원	46.9
		기업소공장 노동자	34.5
		군관	7.1

표 7.22: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복수 응답)

순 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응답 비율(%)
1순위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	45.5
	정치사상성의 차이	23.6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16.3
	출신성분의 차이	6.5
2순위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38.2
	본인직위의 높고 낮음	22.8
	출신성분의 차이	17.9
	개인성격/자기노력의 차이	10.6
3순위	출신성분의 차이	24.6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17.2
	개인성격/자기노력의 차이	13.9
	사는 지역의 차이	13.1

조사대상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이웃과 비교한 경우 자신의 생활수준이 나았다는 응답이 41.2%, 옆집의 생활수준이 나았다는 응답이 26.2%로 나타났으며 비슷했다는 응답이 32.5%를 차지하였다. 친척과 비교하는 경우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나았다는 응답이 37.6%, 친척들의 생활수준이 나았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34.4%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이 낮거나 비슷했다는 응답이 70—80%를 차지하여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사결과가 지난해 입국한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7.23: 북한에 거주할 당시 생활수준 비교

구 분	생활수준	응답 비율 (%)
이웃과 비교	내 생활수준이 훨씬 좋았다	9.5
	내 생활수준이 약간 더 좋았다	31.7
	옆집의 생활수준이 훨씬 좋았다	13.5
	옆집의 생활수준이 약간 더 좋았다	12.7
	모두 비슷했다	32.5
친척과 비교	내 생활수준이 훨씬 좋았다	12
	내 생활수준이 약간 더 좋았다	25.6
	친척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좋았다	14.4
	친척들의 생활수준이 약간 더 좋았다	13.6
	모두 비슷했다	34.4

### 7.3 시장경제화 실태

조사대상 주민들의 다수는 북한에서 장사단속이 가장 느슨했던 시기는 90년대 후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간정도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었으며 가장 심했던 시기는 2010년대 초반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90년대 후반은 고난의 행군과 그에 이은 사회주의 강행군 시기로서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생산주체별 자력갱생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통제력 또한 극도로 이완되었던 시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비롯해 각종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상업활동에도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 초반의 단속 강화는 2005년 하반기 이후 보수화되기 시작한 경제정책이 절정에 달하였던 2009년 11월말의 화폐개혁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폐쇄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으나 이를 사실상 철회하는데 시간이 걸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7.24: 북한에서 장사단속이 가장 느슨했던 시기와 심했던 시기

구 분	시 기	응답 비율 (%)
가장 느슨했던 시기	1980년대 후반	25.2
	1990년대 초반	14.4
	<u>1990년대 후반</u>	<u>31.5</u>
	2000년대 초반	12.6
	2000년대 후반	9
	2010년대 초반	7.2
중간 정도 시기	1980년대 후반	0.9
	1990년대 초반	12
	1990년대 후반	13
	<u>2000년대 초반</u>	<u>49.1</u>
	2000년대 후반	18.5
	2010년대 초반	6.5
가장 심했던 시기	1980년대 후반	3.7
	1990년대 초반	5.5
	1990년대 후반	13.8
	2000년대 초반	7.3
	2000년대 후반	18.3
	<u>2010년대 초반</u>	<u>51.4</u>

조사대상 주민들이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소매장사로 36.8%였다. 그 다음으로 도매업인 되거리장사나 외화별이계통이 각각 10.4%를 차지하였으며 돈장사도 6.6%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매나 되거리장사가 50%를 차지하였다. 22.6%를 차지한 기타는 중국과의 거래(밀수 등), 소토지 농사, 운전, 밀수업, 자기 것을 봄에 미리주고 가을에 몇 배로 받는 것 등이었다.

조사대상 주민들의 직업별 주된 수입원의 경우 노동자들은 소매장사의 비중이 31.4%로 가장 컸고 외화별이계통과 되거리장사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농민의 경우 소매장사가 42.9%를 차지하였고 전문가의 경우 소매장사에 이어 돈장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매장사의 비중이 69.2%로 가장 컸으며 되거리장사는 23.1%였다. 가정부인의 경우도 소매장사가 46.7%로 가장 컸

표 7.25: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일거리	빈도(명)	응답 비율(%)
소매장사	39	36.8
개인편의봉사	5	4.7
개인임가공	2	1.9
식당, 상점임대운영	2	1.9
퇴거리장사	11	10.4
외화벌이계통	11	10.4
돈장사	7	6.6
샅벌이	4	3.8
해외과견노력	1	0.9
기타	24	22.6

으며 그 다음을 퇴거리장사가 차지하였다. 직업별로 소매장사가 차지한 비중의 크기는 장사, 가정부인, 농민, 전문가, 노동자의 순이었으며 퇴거리장사의 경우 장사, 가정부인, 노동자들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민들이 주된 수입원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이상이 35.0%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년 미만이 28.2%였다.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21.3%인 반면 3년 이상이 절반을 약간 넘는 50.5%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주민들이 주된 수입원에 종사한 기간은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0대의 경우 6개월 미만이 75.0%를 차지하였고, 3년 이상은 하나도 없다. 3년 이상 지속한 경우 20대는 34.3%, 30대는 60.9%, 40대는 52.0%, 50대는 62.5%였으며 60대 이상은 5년 이상이 100%를 차지하였다.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료자재 원산지의 경우 조사대상 주민들이 북한, 중국, 남한, 러시아, 일본, 기타 나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결과, 북한산이 22.5%인 반면 중국산이 73.0%, 남한산이 4.5%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원자재 가운데 중국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산과 러시아산, 기타 다른 나라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민들이 주된 수입원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장사물건이나 원자재의 원산지를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자, 농민, 장사 종사자들은 중국산의 비중이 높지만, 중국산과 북한산을 모두 취급하였다. 노동자들의 경우 중국산이 71.0%이고 나머지는 북한산을 사용한 반면 농민들은 북한산과 중국산을 각각 42.9%로 같이 취급하였고, 장사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산이 90.0%이고 북한산은 10.0%였다. 외화벌이일꾼이나 군인, 학생들의 경우도 중국산이나 북한산을 사용하였다고 응

표 7.26: 직업별 주된 수입원

구분		수입원								
		소매 장사	개인 편의봉사	개인 임가공	식당/상점 임대운영	퇴거리 장사	외화별이 계통	돈장사	샅별이	해외 파견노력
노동자	빈도(명)	11	1	0	0	4	7	1	2	0
	비중(%)	31.4	2.9	0	0	11.4	20	2.9	5.7	0
농민	빈도(명)	3	1	0	0	0	0	1	1	0
	비중(%)	42.9	14.3	0	0	0	0	14.3	14.3	0
사무원	빈도(명)	1	1	0	1	0	0	0	0	0
	비중(%)	20	20	0	20	0	0	0	0	0
전문가	빈도(명)	3	0	0	0	0	0	2	1	1
	비중(%)	33.3	0	0	0	0	0	22.2	11.1	11.1
학생	빈도(명)	1	0	2	0	0	0	0	0	0
	비중(%)	20	0	40	0	0	0	0	0	0
군인	빈도(명)	0	1	0	0	0	1	1	0	0
	비중(%)	0	25	0	0	0	25	25	0	0
외화별이 일군	빈도(명)	0	0	0	0	0	2	0	0	0
	비중(%)	0	0	0	0	0	66.7	0	0	0
장사	빈도(명)	9	0	0	0	3	0	1	0	0
	비중(%)	69.2	0	0	0	23.1	0	7.7	0	0
가정부인	빈도(명)	7	0	0	1	2	0	1	0	0
	비중(%)	46.7	0	0	6.7	13.3	0	6.7	0	0
무직/기타	빈도(명)	3	1	0	0	0	1	0	0	0
	비중(%)	42.9	14.3	0	0	0	14.3	0	0	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02

표 7.27: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지속 기간	응답 비율(%)
6개월 미만	15.5
6개월이상-1년미만	5.8
1년이상-3년미만	28.2
3년이상-5년미만	15.5
5년이상	35

표 7.28: 연령별 주된 수입원 종사기간

구 분		수입원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대 (만19세미만)	빈도(명)	3	0	1	0	0
	비중(%)	75	0	25	0	0
20대 (만20-29세)	빈도(명)	9	2	12	8	4
	비중(%)	25.7	5.7	34.3	22.9	11.4
30대 (만30-39세)	빈도(명)	1	1	7	6	8
	비중(%)	4.3	4.3	30.4	26.1	34.8
40대 (만40-49세)	빈도(명)	3	2	7	2	11
	비중(%)	12	8	28	8	44
50대 (만50-59세)	빈도(명)	0	1	2	0	5
	비중(%)	0	12.5	25	0	62.5
60대이상 (만60세이상)	빈도(명)	0	0	0	0	7
	비중(%)	0	0	0	0	1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01.

표 7.29: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자재 원산지

원산지	빈도(명)	응답 비율(%)
북한	20	22.5
중국	65	73
남한	4	4.5

답하였다. 이에 비해 사무원과 전문가들은 중국산과 남한산을 취급하였고 가정부인들은 중국산만 취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사물건과 원자재의 원산지를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의 경우 중국산과 남한산만 사용한 반면 무학인 경우 100% 북한산만 사용하였다. 전문학교의 경우 중국산과 북한산만 사용하였으며 고등중학교의 경우는 중국산이나 북한산과 함께 남한산도 일부 사용하였다.

장사물건과 원자재의 원산지를 당원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당원의 경우 북한산이 55.6%로 절반을 넘었고 중국산이 44.4%였던 반면 남한산은 사용하지 않았다. 비당원의 경우는 중국산이 75.6%로 압도적이었으며 북한산과 남한산을 사용하였다.

장사물건과 원자재의 원산지를 주된 수입원에 따라 살펴보면 중국산의 경우 소

표 7.30: 직업별 장사물건 및 원자재 원산지

구 분		원산지			전체
		북한	중국	남한	
노동자	빈도 (명)	9	22	0	31
	비중 (%)	29	71	0	100
농민	빈도 (명)	3	3	1	7
	비중 (%)	42.9	42.9	14.3	100
사무원	빈도 (명)	0	3	1	4
	비중 (%)	0	75	25	100
전문가	빈도 (명)	0	5	1	6
	비중 (%)	0	83.3	16.7	100
학생	빈도 (명)	2	2	0	4
	비중 (%)	50	50	0	100
군인	빈도 (명)	1	3	0	4
	비중 (%)	25	75	0	100
외화벌이일군	빈도 (명)	1	2	0	3
	비중 (%)	33.3	66.7	0	100
장사	빈도 (명)	1	9	0	10
	비중 (%)	10	90	0	100
가정부인	빈도 (명)	0	13	0	13
	비중 (%)	0	100	0	100
무직/기타	빈도 (명)	3	2	0	5
	비중 (%)	60	40	0	1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48

매장사와 개인편의봉사에서 80%를 넘었고 되거리장사와 샅벌이의 경우도 75%를 차지하였으며 외화벌이계통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북한산의 경우 대체로 20%대이지만 외화벌이계통에서는 40%를 보였다. 한편 빈도는 낮지만, 개인임가공의 경우 100% 중국산을 사용하였으며 식당이나 상점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 중국산과 남한산의 비중이 반반이었고 돈 장사의 경우 남한산이 33.3%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주민들은 주된 수입원에 종사하면서 가장 컸던 애로사항으로 사업자금 마련을 들고 그 다음으로 단속이나 뇌물제공 문제를 들었다. 원자재 확보와 열악한 도로, 철도 사정이나 전기부족과 같은 인프라 문제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의 제도화나 산업인프라의 구축도 긴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업은행

표 7.31: 교육수준별 장사물건 및 원자재 원산지

		원자재 원산지			전체
		북한	중국	남한	
대학교 이상	빈도 (명)	0	5	2	7
	비중 (%)	0	71.4	28.6	100
전문학교	빈도 (명)	2	12	0	14
	비중 (%)	14.3	85.7	0	100
고등중학교	빈도 (명)	16	45	2	63
	비중 (%)	25.4	71.4	3.2	100
인민학교	빈도 (명)	0	2	0	2
	비중 (%)	0	100	0	100
무학	빈도 (명)	2	0	0	2
	비중 (%)	100	0	0	1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 (p)=0.011

표 7.32: 당원 여부와 장사물건 및 원자재 원산지

		원자재 원산지			전체
		북한	중국	남한	
당원	빈도 (명)	5	4	0	9
	비중 (%)	55.60%	44.40%	0.00%	100.00%
비당원	빈도 (명)	15	59	4	78
	비중 (%)	19.20%	75.60%	5.10%	10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 (p)=0.046

제도의 도입과 같은 금융제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주된 수입원에 종사하면서 가장 컸던 애로사항을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사업자금 마련에 이어 원자재 확보, 판매경쟁, 단속 또는 뇌물제공 문제를 지적하였고 농민의 경우도 사업자금 마련과 함께 단속이나 뇌물제공 문제를 들었다. 사무원의 경우 사업자금 마련 문제가 100%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와 외화벌이일군은 원자재 확보를 주로 지적하였다. 장사나 가정부인의 경우도 사업자금 마련을 들었다. 한편 빈도는 낮지만 노동자와 농민, 가정부인의 경우 사업수완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주된 수입원에 종사하면서 가장 컸던 애로사항을 주된 수입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한 애로사항이 소매장사, 개인편의봉사, 식당이나 상점운영, 되거리장

표 7.33: 주된 수입원별 장사물건 및 원자재 원산지

구 분		원자재 원산지			전체
		북한	중국	남한	
소매장사	빈도 (명)	6	29	1	36
	비중 (%)	16.7	80.6	2.80%	100
개인편의봉사	빈도 (명)	1	4	0	5
	비중 (%)	20	80	0.00%	100
개인임가공	빈도 (명)	0	1	0	1
	비중 (%)	0	100	0.00%	100
식당, 상점 임대운영	빈도 (명)	0	1	1	2
	비중 (%)	0	50	50.00%	100
퇴거리장사	빈도 (명)	2	6	0	8
	비중 (%)	25	75	0.00%	100
외화별이계통	빈도 (명)	4	6	0	10
	비중 (%)	40	60	0.00%	100
돈장사	빈도 (명)	1	3	2	6
	비중 (%)	16.7	50	33.30%	100
샷별이	빈도 (명)	1	3	0	4
	비중 (%)	25	75	0.00%	100
해외과견노력	빈도 (명)	0	1	0	1
	비중 (%)	0	100	0.00%	100
기타	빈도 (명)	5	10	0	15
	비중 (%)	33.3	66.7	0.00%	1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72

표 7.34: 주된 수입원에 종사하면서 가장 컸던 애로사항

애로사항	빈도 (명)	응답 비율 (%)
사업수완부족	6	6.1
사업자금 마련	47	47.5
원자재 확보	16	16.2
판매경쟁	6	6.1
열악한 도로, 철도	7	7.1
전기부족	7	7.1
단속 또는 뇌물	10	10.1

표 7.35: 직업별 주된 수입원의 애로사항

구 분	수입원의 애로사항							
	사업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열악한 도로, 철도	전기 부족	단속 또는 뇌물	
노동자	빈도 (명)	2	16	4	4	3	1	4
	비중 (%)	5.90%	47.10%	11.80%	11.80%	8.80%	2.90%	11.80%
농민	빈도 (명)	1	2	0	0	1	1	2
	비중 (%)	14.30%	28.60%	0.00%	0.00%	14.30%	14.30%	28.60%
사무원	빈도 (명)	0	5	0	0	0	0	0
	비중 (%)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전문가	빈도 (명)	0	1	4	0	1	0	1
	비중 (%)	0.00%	14.30%	57.10%	0.00%	14.30%	0.00%	14.30%
학생	빈도 (명)	0	1	1	0	0	2	1
	비중 (%)	0.00%	20.00%	20.00%	0.00%	0.00%	40.00%	20.00%
군인	빈도 (명)	0	3	0	0	0	1	0
	비중 (%)	0.00%	75.00%	0.00%	0.00%	0.00%	25.00%	0.00%
외화벌이 일군	빈도 (명)	0	0	2	1	0	0	0
	비중 (%)	0.00%	0.00%	66.70%	33.30%	0.00%	0.00%	0.00%
장사	빈도 (명)	0	8	3	0	1	1	0
	비중 (%)	0.00%	61.50%	23.10%	0.00%	7.70%	7.70%	0.00%
가정부인	빈도 (명)	1	9	1	0	0	0	1
	비중 (%)	8.30%	75.00%	8.30%	0.00%	0.00%	0.00%	8.30%
무직/기타	빈도 (명)	2	2	0	1	0	1	0
	비중 (%)	33.30%	33.30%	0.00%	16.70%	0.00%	16.70%	0.0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59

사, 돈장사의 경우 모두 사업자금 마련이었다. 이에 비해 개인임가공의 경우는 전기 부족을, 외화벌이계통은 판매경쟁을, 해외과건 노력의 경우는 열악한 철도, 도로 사정을 지적하였다. 소매장사, 되거리장사, 외화벌이계통의 경우도 열악한 교통사정을 지적하였다. 한편 소매장사, 되거리장사, 샅벌이의 경우 사업수완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고, 소매장사, 되거리장사, 외화벌이계통, 돈장사의 경우 단속이나 뇌물문제를 지적한 반면, 개인편의봉사, 개인임가공, 식당이나 상점의 임대운영, 샅벌이, 해외과건 노력의 경우는 단속이나 뇌물문제를 들지 않았다.

주된 수입원에 종사할 때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에서 사업이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업의 영세성은 고용인원 수에서도 확인된다. 주된 수입원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연평균 고용한 인원수는 3명 이하가 57%를 차지하였고 5인 이

표 7.36: 주된 수입원별 애로사항

구 분	애로사항							
	사업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원자재 확보	판매경쟁	열악한 도로, 철도	전기부족	단속 또는 뇌물	
소매장사	빈도(명)	3	21	7	0	2	1	3
	비중(%)	8.10%	56.80%	18.90%	0.00%	5.40%	2.70%	8.10%
개인편의 봉사	빈도(명)	0	4	0	0	0	1	0
	비중(%)	0.00%	80.00%	0.00%	0.00%	0.00%	20.00%	0.00%
개인 입가공	빈도(명)	0	0	0	0	0	2	0
	비중(%)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식당, 상점 임대운영	빈도(명)	0	2	0	0	0	0	0
	비중(%)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되거리 장사	빈도(명)	1	6	1	1	1	0	1
	비중(%)	9.10%	54.50%	9.10%	9.10%	9.10%	0.00%	9.10%
외화별이 계통	빈도(명)	0	4	1	4	1	0	1
	비중(%)	0.00%	36.40%	9.10%	36.40%	9.10%	0.00%	9.10%
돈장사	빈도(명)	0	3	2	0	0	0	2
	비중(%)	0.00%	42.90%	28.60%	0.00%	0.00%	0.00%	28.60%
샷별이	빈도(명)	1	1	2	0	0	0	0
	비중(%)	25.00%	25.00%	50.00%	0.00%	0.00%	0.00%	0.00%
해외파견 노력	빈도(명)	0	0	0	0	1	0	0
	비중(%)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기타	빈도(명)	1	6	2	1	2	3	3
	비중(%)	5.60%	33.30%	11.10%	5.60%	11.10%	16.70%	16.7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03

표 7.37: 주된 수입원 종사시 다른 사람 고용 여부

고용 여부	빈도(명)	응답 비율(%)
있다	25	25
없다	75	75

하로 보면 66.5%로 나타났다. 반면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33.4%를 차지하였고 10인 이상의 경우 23.8%로 나타났다. 참고로 20인 이상을 고용한 두 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은 퇴거리장사와 외화별이계통이었다. 고용인원수를 밝힌 응답자 21명의 1인당 평균 고용 인원수는 약 5.5명으로 나타났다.

표 7.38: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수(연평균)

고용 인원수(명)	빈도(명)	응답 비율(%)
1	4	19
2	4	19
3	4	19
4	2	9.5
6	1	4.8
7	1	4.8
10	3	14.3
20	2	9.5

주된 수입원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연평균 고용일 수는 30일 이하가 26.4%, 3개월인 90일 이하가 절반에 가까운 47.4%로 나타났으며, 6개월인 180일 이하로 보면 73.8%를 차지하였다. 반면 6개월 이상-12개월 간 고용하는 경우는 26.4%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대부분 계절노동과 같은 단기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대상 주민들 중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적인 고용기간은 약 152일로 나타났다.

표 7.39: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 기간(연평균)

고용 기간(일)	빈도(명)	응답 비율(%)
6	1	5.3
10	1	5.3
20	1	5.3
30	2	10.5
60	2	10.5
90	2	10.5
150	1	5.3
180	4	21.1
240	1	5.3
300	1	5.3
360	3	15.8

조사대상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국가가 개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개인호상

간에 매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유화대상은 시장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토지(폐기밭)과 살림집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시장매대, 소토지, 살림집을 합하면 72.7%였다. 농장분조경작지나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에 대한 사유화는 1순위에서 각각 7.7%와 1.7%를 차지하였다. 한편 사유화대상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6.8%로, 조사대상 주민의 90% 이상은 사유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0: 우선적인 사유화 대상 인식

순 위	사유화 대상	응답 비율(%)
1순위	소토지(폐기밭)	28.2
	살림집	12.0
	시장매대	32.5
	개인운영 국가 상점	4.3
	농장분조경작지	7.7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1.7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	6.8
	생각해본 적 없음	6.8
2순위	소토지(폐기밭)	15.1
	살림집	26.4
	시장매대	12.3
	개인운영 국가 상점	13.2
	농장분조경작지	7.5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9.4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	12.3
	생각해본 적 없음	3.8

우선적인 사유화대상에 대한 조사대상주민들의 응답을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자와 장사 종사자의 경우 시장매대-소토지(폐기밭)를, 농민과 무직(기타)의 경우 소토지(폐기밭)-시장매대를, 사무원의 경우 시장매대-농장분조경작지를, 전문가의 경우 소토지-농장분조경작지를, 학생의 경우 소토지-지방산업공장을, 군인은 소토지-시장매대를, 외화벌이일군은 시장매대-개인소유 발동선/화물선을, 가정부인의 경우 시장매대와 살림집을 각각 우선적인 사유화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를 상회하였다.

우선적인 사유화대상에 대한 조사대상 주민들의 응답을 주된 수입원에 따라 살펴보면 업종별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매대 사유화의 경우 소매장사가 42.9%, 되거리장사는 50%를 차지하였고, 개인임가공업의 경우 살림집과 함께 소규모지방

표 7.41: 직업별 사유화대상 인식

구 분	사유화대상(1순위)								
	소토지 (꽤기밭)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운영 국가상점	농장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개인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적 없음	
노동자	빈도(명)	13	6	14	2	1	0	3	1
	비중(%)	32.50%	15.00%	35.00%	5.00%	2.50%	0.00%	7.50%	2.50%
농민	빈도(명)	3	2	2	0	1	0	0	1
	비중(%)	33.30%	22.20%	22.20%	0.00%	11.10%	0.00%	0.00%	11.10%
사무원	빈도(명)	1	0	2	1	2	0	1	0
	비중(%)	14.30%	0.00%	28.60%	14.30%	28.60%	0.00%	14.30%	0.00%
전문가	빈도(명)	3	1	0	1	2	0	0	2
	비중(%)	33.30%	11.10%	0.00%	11.10%	22.20%	0.00%	0.00%	22.20%
학생	빈도(명)	2	1	1	0	1	2	1	0
	비중(%)	25.00%	12.50%	12.50%	0.00%	12.50%	25.00%	12.50%	0.00%
군인	빈도(명)	2	0	2	0	0	0	0	1
	비중(%)	40.00%	0.00%	40.00%	0.00%	0.00%	0.00%	0.00%	20.00%
외화별이 일군	빈도(명)	0	0	1	0	0	0	1	1
	비중(%)	0.00%	0.00%	33.30%	0.00%	0.00%	0.00%	33.30%	33.30%
장사	빈도(명)	3	0	8	0	1	0	1	0
	비중(%)	23.10%	0.00%	61.50%	0.00%	7.70%	0.00%	7.70%	0.00%
가정부인	빈도(명)	1	4	7	1	1	0	0	1
	비중(%)	6.70%	26.70%	46.70%	6.70%	6.70%	0.00%	0.00%	6.70%
무직/기타	빈도(명)	3	0	1	0	0	0	1	1
	비중(%)	50.00%	0.00%	16.70%	0.00%	0.00%	0.00%	16.70%	16.7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55

산업공장의 사유화를 지적하였으며, 소매장사, 되거리장사, 외화별이계통은 개인소유 화물차나 발동선의 사유화를 들었다. 샷별이의 경우 소토지 사유화가 75%였고 해외파견노력의 경우는 개인운영국가상점의 사유화를 들었다.

## 7.4 사회의 개방성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이 정치나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조사대상 주민들의 74%는 2000년대 이후에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내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대외적 환경 개선이 북한사회 전반에 이전보다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북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경쟁의식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조사대상 주민들의 73%는 2000년대 이후가 더

표 7.42: 주된 수입원별 사유화대상 인식

구 분	사유화대상(1순위)								
	소토지 (돼기밭)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운영 국가상점	농장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개인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적 없음	
소매장사	빈도(명)	8	5	15	1	2	0	2	2
	비중(%)	22.90%	14.30%	42.90%	2.90%	5.70%	0.00%	5.70%	5.70%
개인편의 봉사	빈도(명)	2	0	2	0	1	0	0	0
	비중(%)	40.00%	0.00%	40.00%	0.00%	20.00%	0.00%	0.00%	0.00%
개인 임가공	빈도(명)	0	1	0	0	0	1	0	0
	비중(%)	0.00%	50.00%	0.00%	0.00%	0.00%	50.00%	0.00%	0.00%
식당, 상점 임대운영	빈도(명)	0	0	1	0	1	0	0	0
	비중(%)	0.00%	0.00%	50.00%	0.00%	50.00%	0.00%	0.00%	0.00%
퇴거리 장사	빈도(명)	2	2	5	0	0	0	1	0
	비중(%)	20.00%	20.00%	50.00%	0.00%	0.00%	0.00%	10.00%	0.00%
외화별이 계통	빈도(명)	2	2	5	0	0	0	1	1
	비중(%)	18.20%	18.20%	45.50%	0.00%	0.00%	0.00%	9.10%	9.10%
돈장사	빈도(명)	3	2	1	0	1	0	0	0
	비중(%)	42.90%	28.60%	14.30%	0.00%	14.30%	0.00%	0.00%	0.00%
삿벌이	빈도(명)	3	0	0	0	1	0	0	0
	비중(%)	75.00%	0.00%	0.00%	0.00%	25.00%	0.00%	0.00%	0.00%
해외파견 노력	빈도(명)	0	0	0	1	0	0	0	0
	비중(%)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기타	빈도(명)	7	0	4	2	2	1	2	3
	비중(%)	33.30%	0.00%	19.00%	9.50%	9.50%	4.80%	9.50%	14.30%

\* 카이제곱 검증 유의확률(p)=0.019

표 7.43: 북한주민들의 정치나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 빈도

정치나 간부 이야기 빈도	빈도(명)	응답 비율(%)
2000년대 이전에 훨씬 더 자주 얘기함	9	7.1
2000년대 이전에 조금 더 자주 얘기함	7	5.5
2000년대 이후에 훨씬 더 자주 얘기함	66	52
2000년대 이후에 조금 더 자주 얘기함	28	22
2000년대 이전과 이후 별 차이 없음	17	13.4

심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0년대 초 북한에서 실력이 강조된 데다, 국가에 의한 공급과 사회적 보장체계가 무너지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도래하고 경제적 계층분화 등 사회적 분화들이 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국가의 온정과 평균주의에 안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는 개별 주체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44: 북한에서 경쟁의식의 심화 정도

경쟁의식 심화 정도	빈도(명)	응답 비율(%)
2000년대 이전이 훨씬 더 심했음	16	12.7
2000년대 이전이 약간 더 심했음	5	4
2000년대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음	72	57.1
2000년대 이후에 약간 더 심해졌음	20	15.9
2000년대 이전과 이후 별 차이 없음	13	10.3

200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조사대상 주민들의 37%는 2000년대 이후 이동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44.1%는 2000년대 이전에 이동이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이동한데다 국가의 통제마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00년대는 경제상황이 제한적이거나 개선된 데다 국가가 사회경제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물리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이 일정하게 억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7.45: 북한주민들의 다른 지역 이동 빈도

이동 빈도	빈도(명)	응답 비율 (%)
2000년대 이전에 훨씬 더 많았음	42	33.1
2000년대 이전에 조금 더 많았음	14	11.0
200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아짐	29	22.8
2000년대 이후에 조금 더 많아짐	18	14.2
2000년대 이전과 이후 별 차이 없음	24	18.9

## 7.5 맺는 말

이제까지 북한 주민들의 빈부격차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빈부격차와 관련하여 생활수준과 빈부격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시장경제화 실태와 사회적 개방성도 알아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가구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32.4%이며 특히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비의 총합이 1천원 미만인 동시에 사적인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1만원 미만인 최하층도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사적 경제활동 소득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22%나 된다. 월평균 사적 경제활동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최상층의 경우도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층과 최하층 간에는 최소한 100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적 계층질서와 관련하여 중앙당 간부나 법기관 간부 다음으로 외화벌이종사자나 시장상인들이 부유한 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농장원이 가장 못살고 그 다음으로 기업소 노동자들이 못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둘째, 북한에서는 경제적 계층이동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이 탈북직전인 2010년쯤 되면 2000년대 전반에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던 주민들 중 14.3%만 상층에 속하고 나머지는 중하층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전반에 중층에 속하였던 사람들도 탈북직전이 되면 절반 정도만 중층에 남고 나머지는 소수 상층과 다수 하층으로 분화된다. 하층의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층과 상층으로 상승한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에 상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중 탈북직전까지 상층에 속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는 북한에서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를 허물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적 계층질서가 매우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불안정은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의미하기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매우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확대재생산해 나갈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권력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 주민들이 여전히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직위의 높고 낮음이나 정치사상성,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출신성분 등을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나 조사대상 주민들의 일상적 고민거리가 돈 버는 것 다

음으로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각종 단속에 대한 우려인 데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 각종 단속을 피하면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뇌물이 총수입의 10%를 넘어서는 경우도 61.5%나 되었으며 조사대상 주민의 80% 이상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부격차 심화와 경제적 계층질서 형성의 배경인 시장경제화 실태와 관련 해서도 주된 수입원이 된 사적 경제활동을 지속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을 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금융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자금마련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영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수입원이 된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25%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1인당 평균 고용인 수는 약 5.5명, 고용기간은 연간 약 152일(5개월 정도)이었다. 조사대상 주민들이 사용한 장사물건이나 원자재의 원산지의 경우 중국산이 7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북한산이 22.5%였고 남한산이 4.5%를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일본산이나 러시아산, 기타 다른 나라 상품이나 원자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민들의 사유화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민들 중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사유화 대상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는 6.8%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사유화 문제를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72.7%는 우선적인 사유화 대상으로 소토지, 시장매대, 살림집을 들었다. 경제적 체제전환을 위한 중요한 출발인 협동농장분조경작지나 지방산업공장에 대한 사유화를 생각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농장분조경작지의 사유화에 대한 인식은 농민들 내에서조차 소토지(33.3%)와 살림집(22.2%), 시장매대(22.2%)에 이어 네 번째인 11.1%에 그쳤다. 사유화 대상을 생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것들과 특히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소토지(땀기밭)나 시장매대 정도의 사유화를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0년대를 전후로 한 사회적 개방성 변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가 그 이전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정치나 간부에 대한 이야기 빈도가 늘어났다는 응답에서 확인된다. 자력갱생이 자리 잡고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쟁의식 또한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2000년대 이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난의 행군과 비교해서 제한적이거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존을 위한 사회적 유동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경제적, 사회적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화와 통제강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 제 3 편

# 부록: 토론문 및 설문문항



## 제 8 장

# 토론문

### 2012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과 김정은 체제 전망

공용철 (KBS 다큐멘터리국 책임프로듀서)

#### 김정은 체제의 8개월 평가

- 리영호의 숙청이 보여 주듯이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희망 김정은이 당·정·군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의 비동맹회의 참석과 장성택의 방중은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인 권력 이양과 체제안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새로운 지도체제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민심 얻기가 중요한데, 김정은은 민심도 확실하게 장악해 가고 있음.
- 김정은 체제 8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치고 영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의지가 분출하고 있음.

#### 2012년 8월의 북한 동향

- 6·28조치라고 알려진 내부의 개혁 동향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음 (10여 명의 북한 주민 증언, 8월 현재).

- 가장 큰 변화는 민심의 변화임, 지난해까지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는 “전쟁이나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였음. 이 말에는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현재의 질서가 바뀌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음.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전쟁 얘기는 쪽 들어가고 개혁·개방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음.
-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변화 열기가 더욱 강함. 외국어와 경제 지식, 국제정세와 중국의 발전상을 학습하려는 학습열기가 충만해지고 있음.
- 1983년 후계자 시절에 김정일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중하고 개혁·개방의 성과를 몸소 체험한 후 1984년 8.3인민 소비품 생산운동, 농민시장 활성화 등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혁 조치들을 내놓아 개혁·개방의 열기가 넘쳤는데 30년 만에 비슷한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음.

###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열기 고조

-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중하층 주민들의 경우 4·15를 계기로 많은 선물을 하사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이면서 최고 지도자가 인민경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여준 것에 대해 특히 감사해 하고 있음. 대중과 스킨십을 확대하고 대중지향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충성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계층별로 보면 인민들의 충성열기가 특히 고조되었음. 정치 공학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인민’과 ‘대중’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인민은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계’, ‘항일계’ (투사계),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고 대중은 인민 아래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피지배 계층임. 북한의 지배세력은 이 가운데 자신들이 인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계와 항일계,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만 잘 건사하면 체제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음. 북한에서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란 6·25전쟁 참가자, 전사자, 전쟁 중 학살당한 피살자, 전후의 냉전과정에서 희생된 사회주의 애국 열사를 말함.
- 인민들의 충성열기가 고조 된 것은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에게 외화벌이 기회를 확대해 주었다는 점임. 200만 안팎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외화벌이 과정에서 소외당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해 왔음. 북한의 계층구조에서 달러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외화경제에 기

반을 둔 사람들을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동안은 군부와 특수단위, 가계, 항일계가 외화벌이와 대외무역을 독점해 왔고, 김정은으로선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의 달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지배연합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음.

- 올해 들어서 중국과의 노동협력이 확대되면서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에게 해외파견 근로의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계층 내에서 ‘김정은 원수님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 중국과의 노동협력 실태

- 2012년 들어서 북한 노동력의 중국 파견이 급증하고 있음, 정확한 통계를 뽑기는 어려우나 요녕성 단둥시 일대에만 올해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되었다고 현지의 중국인들이 증언하고 있음. 6월 이후 1일 200-300명씩 3개월 가까이 북한 근로자들이 단둥으로 들어왔다고 함. 파견된 근로자들 가운데 남성이 40%, 여성이 60%가량이라고 함.
-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의류나 봉제, 신발, 냉동창고, 수산물 가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중국인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북한 근로자들을 원하는 사업장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함.
- 단둥시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인건비가 월 400달러 안팎인데 북한 근로자들은 250달러를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옴.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받은 250달러 가운데 100달러를 당 자금으로 내고 숙식비로 50달러 내외를 사용하고 나면 월 100달러 내외를 개인 몫으로 챙길 수 있음.
- 단둥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역시 다른 해외 파견근로자들처럼 공장 내에서 단체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음. 다만 관리인들이나 주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중국의 시장에 나와서 야채나 식재료를 구입해가기 때문에 단둥의 재래시장 곳곳에 북한 주민들이 늘어났음.

### 김정은 체제 전망

- 1980년대 초중반 북한을 휩쓸었던 개혁·개방 열기는 천안문 사태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로 싸늘하게 식었음. 2012년은 중국의 정치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와 같은 체제위협적 동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개혁·개방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부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뜻임.

- 내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우선 기업개혁의 경우 외부 자본의 수혈이 필수적임. 그런 맥락에서 장성택의 방중에서 차관 얘기가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농업개혁의 경우 국내에서 분조단위의 축소와 가족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있음. 약 400-500여명의 농장원들이 일하는 북한의 협동농장에 10%이상이 간부임, 농사를 짓지 않고 놀고먹는 계층이 10%라는 얘긴데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이런 간부들도 힘든 농사일을 해야 함.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하게 할 것인가가 북한 농업개혁의 핵심과제임. 즉 개혁과정에서 현재의 기득권 계층이 소외당하지 않으면서 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핵심 과제임.
- 내부의 개혁이 지난한 과제임에 반해 대외 개방은 훨씬 양호한 조건임, 무엇보다도 중국의 발전이 눈부시고 중국의 발전에 따른 개발이익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치만으로 당국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상당부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의 달러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내 정치적 압박,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안정화를 바라는 중국의 국가 이익, 긴 호흡으로 경제 재건과 체제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정치적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특구 중심의 부분적인 개방조치들은 지속될 것임.
- 개방방법으로는 장성택의 방중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기적으로는 나선과 황금평, 위화도 특구 개발과 활성화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파견 확대를 통한 외화벌이가 될 것임.
- 김정은 체제는 내부의 권력 장악과 주민들의 민심을 기반으로 상당기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조치와 중국을 통한 남북관계 활성화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돼 있지만 중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는 한중무역의 증가, 북중무역의 증가라는 틀속에서 남북경협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중국을 통한 남북 무역 증가, 청도의 한국기업들 북한에 위탁가공 등).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상실 위기.
- 북한이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으로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 중국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음 (경협 측면에서).
-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 가속화는 중국이라는 완충지대에서 풀뿌리 차원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북한사회 전망

한기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객원교수)

### 현재 추세의 연장선

- 당국과 사회; 각자 방해 않고 살아가는 미묘한 관계 형성.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주민들의 기본생활이 향상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당국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기능은 여전히 와해된 상태. 주민들은 당국에 의지 않고 자력생존의 방법을 터득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 당국이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듯이, 사회는 당국에 ‘알아서 살아갈 테니 간섭하지 마라’고 주문하고 있음. 당국과 사회는 지난 20년간 수차례 긴장관계를 경험하면서 미묘한 질서를 정착시켰음.
- 공안통치정치 과잉으로 인한 억압구조 하에 불만 누적.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 정치의 빈번한 동원으로 생존에 투자할 많은 시간들을 박탈당했음. 김정일 애도, 대남 궤기대회, 3김(金) 생일 및 추대행사, 국가적 노력동원 참가 등으로 텃밭을 일구고 장사를 해야 할 시간들을 빼앗겼음. 공안기구는 비사검열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모임을 주시하면서 새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견(異見)을 감시했음. 새로 교체된 지방간부들은 개국공신임을 자임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귀찮게 했음. 생활현장에 대한 간섭과 억압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치의 기세에 놀려 불만을 터트리기가 어려웠음.
- 평양과 지방, 축재자와 빈곤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 당국은 2012년에 경제 강국의 문패를 달겠다고 호언하더니 대경축일이라고 선전하던 4.15 당일에도 전인민적 배급에 실패했음. 지방 주민들은 ‘국상(國喪)’을 당했기 때문에 불만을 자제하려 했더니 선택된 계층이 사는 평양에 국한해 경제 강국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나 배신감을 느꼈음. 아파트 건설, 도시치장, 복지혜택 등 풍악소리는 평양에 국한되었음. 새 지도자 김정은도 평양시내 백화점, 소학교, 동물원, 유희장을 들러보았을

뿐 수해를 입은 지방주민들의 통곡소리는 외면했음. 옆집은 지방간부와 의 연줄로 돈벌이에 성공했는데, 자신은 그날그날 풀칠하기에 급급해 늘 가족에게 미안했음. 고드럽게 사는 사회가 아님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무능한 정권에 대한 반감과 새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혼재.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이 뭔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음. 젊은 지도자가 품을 잡으려 하기 보다는 말단 병사나 인민들과 손을 잡고 웃거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날라리풍이라고 금지했던 서구풍 악단공연도 볼 수 있게 해주었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협동농장을 가족끼리 농사지을 수 있도록 나눠 주겠다,’ ‘지방의 공장기업소들을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어보기로 하였음.
- 세뇌교양과 지원감소로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
  - ‘미제와 남조선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국상에 남조선 인민들의 애도 표시를 방해하였고, 최고 존엄에 대한 신성모독을 반복하고 있다. 동포의 정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우리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매게 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선전에 대해 동조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 당국이 한국 당국에 대한 적개심 표현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대남 규탄행사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 변동 요인

- 1) 당국과 사회 간 탈구(脫句) 현상의 심화, 2) 정치 과잉에 따른 사회적 불만 누적, 3)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4) 무능한 정권인식 하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막연한 기대, 5) 적대적 세계관의 증대로 요약되는 북한사회 구조와 의식세계가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변화모습을 보일 것인가?

- 북한사회의 변동요인을 당국의 경제사회관리 정책, 사회자체의 변동요인 누적, 외부의 관여확대로 인한 파급효과로 나누어 본다면 당국정책 > 외부관여 > 사회 자체의 추동력 순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에서의 학습효과, 당국의 무능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감, 이에 따른 체제변화 압력이 5년 이내에 노골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민생개선 노력의 한계, 경제개혁 시행착오의 반복과 부작용 확산으로 결과적으로는 자력생존에 대한 간섭과 불평등 구조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정치와 사회의 긴장관계는 확대 재생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에 올인하기 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세계를 각성시켜 당국에 대한 변화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 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적극적 관여(지원과 접촉면 확대) → 북한 민심사기의식전환 (mind change) → 정권 개혁개방(regime evolution) 압력.

# 제 9 장

##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설문문항

### 통일의식

-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3) 반반/그저 그렇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원한다.
  - (2) 약간 원한다.
  -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 귀하는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1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 금강산 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 (2)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 (3) 별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 (4)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8.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 (1) 북한에서 살 것이다.
  - (2) 남한에서 살 것이다.
  - (3)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 (4)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대남인식

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1)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2)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3)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4)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5)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 |                       | 매우<br>잘<br>알았다 | 조금<br>알았다 | 들어<br>본 적<br>있다 | 전혀<br>몰랐다 |
|-----------------------|----------------|-----------|-----------------|-----------|
| ㉠ 4·19 혁명             | 1              | 2         | 3               | 4         |
| ㉡ 5·18 광주<br>항쟁       | 1              | 2         | 3               | 4         |
| ㉢ 88 서울올<br>림픽        | 1              | 2         | 3               | 4         |
| ㉣ 쇠고기<br>수입반대<br>촛불집회 | 1              | 2         | 3               | 4         |
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자주 접해봤다.
  - (2) 한두 번 접해봤다.
  - (3)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 11-1. (11번에서 (1)과 (2)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 (1) 매우 친숙했다.
  - (2) 약간 친숙했다.
  - (3)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4)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 |            | 많이<br>있다 | 다소<br>있다 | 별로<br>없다 | 전혀<br>없다 |
|------------|----------|----------|----------|----------|
| ㉠ 선거방<br>식 | 1        | 2        | 3        | 4        |
| ㉡ 생활수<br>준 | 1        | 2        | 3        | 4        |
| ㉢ 역사인<br>식 | 1        | 2        | 3        | 4        |
| ㉣ 언어사<br>용 | 1        | 2        | 3        | 4        |
| ㉤ 생활풍<br>습 | 1        | 2        | 3        | 4        |
| ㉥ 가치관      | 1        | 2        | 3        | 4        |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있다.
  -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1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위협적이다.
  - (2) 다소 위협적이다.
  - (3)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4)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5.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조금 알고 있다.
  - (3)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4)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6.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2)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3)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 (4)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5)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2)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3)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4)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5)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2)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3)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 (4)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5)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북한실태변화

19.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2)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3)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4)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10% 미만
- (2) 20%
- (3) 30%
- (4) 40%
- (5) 50%
- (6) 60%
- (7) 70%
- (8) 80%
- (9) 90% 이상

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 (3)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 (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 (3)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4)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많다.
- (2) 약간 있다.
- (3) 대체로 없다.
- (4) 전혀 없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5년 미만
- (2) 5-10년
- (3) 10-15년
- (4) 15-20년
- (5) 20-30년
- (6) 30년 이상
- (7)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2)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3)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4)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5) 지도자(김정일) 때문에
- (6)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7)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8) 통일이 되지 않아서
- (9) 기타 ( )

26. 귀하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1) 10% 미만
- (2) 20%
- (3) 30%
- (4) 40%
- (5) 50%
- (6) 60%
- (7) 70%
- (8) 80%
- (9) 90% 이상

27.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1)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3)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4)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8.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충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30% 미만
- (2) 30-50%
- (3) 50-70%
- (4) 70-90%
- (5) 90% 이상

2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1)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2)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3)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4)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5)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1) 자주 가보았다.
- (2) 가끔 가보았다.
- (3) 거의 가보지 못했다.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2)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3)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 (4)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200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훨씬 더 나아졌다.
- (2) 조금 더 나아졌다.
- (3) 조금 더 나빠졌다.
- (4) 훨씬 더 나빠졌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월생활비(월소득)가 얼마 정도여야 만족할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원)

주변국에 대한 인식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1) 미국
- (2) 일본
- (3) 남한
- (4) 중국
- (5) 러시아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미국
- (2) 일본
- (3) 남한
- (4) 중국
- (5) 러시아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남한사회 적응실태

38.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9.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포용적이다.
- (2) 약간 포용적이다.
- (3)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4)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0.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나는 남한사람이다.
- (2) 나는 북한사람이다.
- (3)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1.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2.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3.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일하는 경우)
- (2)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3)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없이 이동하며 일한 댓가를 받는 경우)
- (4)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 (5)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 (6)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 (7)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등).

44.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                      ) 만원

45.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월 평균 근로 일수 (                      ) 일  
 하루 평균 근로 시간 (                      ) 시간

인구통계학적 정보

46.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47.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 년

48.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              ) 년              월

49.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              ) 년              월

50.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